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 조한범 · 김현택 · 서동주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현대일본학회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 조한범 · 김현택 · 서동주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현대일본학회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6,000원
ISBN 978-89-8479-746-8 9334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현대일본학회
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동 수 부연구위원 박 영 호 소장/선임연구위원 이 기 현 부장/부연구위원 임 강 택 실장/선임연구위원 전 병 곤 소장/선임연구위원 조 한 범 선임연구위원 강 동 완 교수(동여대) 김 갑 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 태 환 교수(국립외교원) 김 현 택 교수(한국외대) 박 인 휘 교수(이화여대) 서 동 주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 상 진 교수(광운대) 이 동 릉 교수(동덕여대) 정 기 응 책임연구위원(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소)
협력 연구 기관	현대일본학회	이 기 태 전문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김 두 승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송 화 섭 책임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목차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 김현택 · 서동주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5
3. 연구 방법	6
II.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9
1.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11
가.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 실태	11
나.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17
2.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20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21
나.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32
다.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47
3. 전문가 인식조사	71
가. 전문가 인식조사 특징	71
나. 인식조사 결과 분석	73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 시사점	99
1.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101
가. 對러시아 통일외교	101
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102
다. 전문가 인식조사 특징	104
2.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시사점과 과제	105
가. 對러시아 통일외교	105
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107

목차

참고문헌	11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5

표 · 그림목차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 김현택 · 서동주

<표 II-1>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통일·안보 관련 공동성명 내용	18
<표 II-2>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주체	36
<표 II-3> 2010년 한·러 문화축제 공식행사 주요 내용	59
<그림 II-1> 소속 기관	72
<그림 II-2> 업무 경력	72
<그림 II-3>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74
<그림 II-4>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74
<그림 II-5>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75
<그림 II-6>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76
<그림 II-7>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77
<그림 II-8>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중요도	78
<그림 II-9>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79
<그림 II-10>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79
<그림 II-11>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81
<그림 II-12>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	82
<그림 II-13> 러시아 국민들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도움	82
<그림 II-14> 러시아 국민의 한반도 인식에 도움을 준 내용	83
<그림 II-15> 러시아 국민 내 한국 통일공공외교 대상	84
<그림 II-16>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	84
<그림 II-17>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85
<그림 II-18>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분야	86

그림목차

<그림 II-19> 한국 통일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 국민 인식	86
<그림 II-20>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87
<그림 II-21>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	88
<그림 II-22>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	88
<그림 II-23>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 주체	89
<그림 II-24> 한국 통일공공외교에 긍정적인 국가	90
<그림 II-25>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90
<그림 II-26> 정부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91
<그림 II-27>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92
<그림 II-28> 북한의 핵개발 의도	93
<그림 II-29>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94
<그림 II-30>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94
<그림 II-31>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	95
<그림 II-32>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이유	96
<그림 II-33> 북핵 정책 수행 시, 러시아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도	97
<그림 II-34>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	97
<그림 II-35>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	98



I 서론

1. 연구 목적

러시아는 한반도의 주요 주변국가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한·소 수교는 탈 냉전기 양국 간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여는 계기로서 이후 양국 관계는 냉전기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 시대사의 조류에 맞추어 1988년 7월 ‘북방 외교’를 선언했으며, 1990년 9월에는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었다. 2008년 9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Dmitry Anatolyevich Medvedev)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는 진일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국 관계개선 추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의식 및 외교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소련 체제의 붕괴와 시장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특성에 따라,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미·소 양강구조를 형성했던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 푸틴 체제가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 것이다. 과거에 비해 약화된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은 한반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개입 제한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와 정치·군사·외교·안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통해 장기간 우방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중국은 G2국가로 새롭게 부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1무역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해왔으며, 과거사 및 우경화 등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양국 간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국제정치와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다른 주변국에 비해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냉전체제와 남북한 분단체제 역시 러시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분단체제의 형성 및 한국전쟁과 관련된 소련의 행보와 냉전기 국제정치 전개과정에서 북한에 일방적이었던 소련의 외교정책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요인들은 한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주변국에 대한 인식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조차 지정학적 특성과 전통적으로 유럽을 우선시하는 대서양 외교정책을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태평양 외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유럽 인접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인구 역시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시베리아와 극동은 러시아 국가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으며, 이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위상이 취약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국경을 인접한 주요국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동시에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미국과 핵 무장 양강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약화된 국력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대한 영토와 아울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 나로호 발사의 주요 기술을 제공했으며, 기초과학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를 중시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의 오랜 숙원이자 푸틴정권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정과제에 해당한다. 이 같은 러시아의 관심 해결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및 가스관 연결 사업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은 필수 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기존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특성과 통일외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對러시아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對러시아 통일외교는 일반외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과 방법을 동원한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對러시아 통일관련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對러시아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특성에 의해 통일외교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공공외교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에 러시아 당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의 통일방안과 외교에 대한 지지 확대를 위한 공공외교 개선방안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2년차 연구로서 1차년도인 2012년에 수행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공공외교 실태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관련 외교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對러시아 통일관련 외교 실태와 내용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러시아의 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을 러시아 국민의 한국 인식, 러시아 국민의 통일관련 한국 인식, 그리고 러시아 국민의 한·러시아 협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의 검토를 위해 목표, 주체, 자원 및 자산, 매체, 그리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의 경우 통일공공외교와 통일관련 공공외교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경우 지식·한국학외교, 문화외교, 기업외교, 스포츠외교와 관광외교 등 분야별 실태를 검토하였다.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경우 북한 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한국과 러시아 현지에서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와 관련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인식조사 결과는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그리고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분야로 나누어 검토했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관련)공공외교의 평가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식조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의 경우, 한국의 對러시아 외교 전반과 통일 공공외교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단행본 및 논문, 그리고 연구보고서 등을 주로 활용했으며,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관련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이용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확보된 실질적인 경험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을 통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파악에 주력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국내와 러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학계의 해당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했다. 러시아 지역의 경우 학계, 언론사,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러시아 지역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각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한 자료들은 본 연구 전반에 걸쳐 활용하였다.

아울러 협동연구의 특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진과의 워크숍을 통해 연구방향 및 개념의 공유를 꾀했으며, 러시아 연구진 간 정기적인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입체적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결과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및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對러시아 및 대북정책 입안과 수행에 대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가.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 실태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30일 수교한 이래 꾸준히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왔으며,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외교 사안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다루어왔다.

일반적으로 통일외교는 “한반도 통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을 사전 교섭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교협상과 그 같은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외교적 행위”로 규정된다.¹ 또한 “우리의 통일문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외교교섭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는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통일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러 외교협상과 우호적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행위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냉전기의 대립관계를 제외할 경우,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는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북방정책’에서 비롯된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에서 “북방외교 추진 및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 개선에 협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 하에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참가하였고, 1989년 동유럽의 체제 전환 과정 속에서 헝가리(2월), 폴란드(11월),

¹ 박영호·여인곤·조민·이기현·김성철,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47~48.

² 위의 책, p. 48.

유고슬라비아(12월)와 수교를 맺게 되었다. 나아가 1990년 9월에는 소련,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었다. 노태우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는 북방외교의 결실로서 한·러 수교를 이끌어 내었고, 이후에는 한국 내 ‘소련 붐(boom)’을 일으켜 한·러 협력 및 각 분야 교류 증진을 이끌어내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냉전시기 적대관계에 있던 러시아와 수교함으로써 탈냉전의 국제정세 변화에 조응함은 물론 새로운 우호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미래 한반도 통일에의 지원세력으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1년 방한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소 우호 협력 조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 공감을 표명하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1992년 11월에 방한한 옐친 대통령은 ‘한·러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성명³을 통해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등 한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외교 사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러시아의 위상과 외교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가운데 한·러관계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협차관 제공을 통한 한·러관계 정상화 정책 추진 등으로 한·러간 외교적 불협화음을 초래하게 되는 잠재적 갈등의 씨앗도 뿌려놓았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 절차의 존중, 공존공영, 민족 복리를 기조로 하면서 공동번영을 강조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일정책으로 내세웠다.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민주적, 평화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⁴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13개 조항의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

³ 옐친 방한시 선언된 공동성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한·러 정상회담 결과 문서” 참조. <<http://rus-moscow.mofa.go.kr>>.

⁴ 박영호·여인곤·조민·이기현·김성철,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p. 66.

로 설정하였으며,⁵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한·러 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내었다. 구체적으로는 모스크바 공동선언 중 동북아 다자안보 문제(6항), 한반도 통일(7항), 북한 핵문제(8항) 등에서 보듯 외교안보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 선언 이후 고조된 북핵문제 해결을 놓고 러시아는 '8자회담'의 제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에의 참여 노력 등을 펼쳤으나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4자회담에서 배제되는 등 외교적 실패를 경험하였고 이는 한·러 간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1996년 1월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기존 한국 중시의 외교 노선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등거리, 균형접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해 당사자로 참여하는 등 영향력 강화 노력도 적극 추진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러시아와의 우호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대러 경험 확대 및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관계 강화 노력을 경주하였다. 전반적으로 한·러관계는 러시아 총선과 대선, 열친의 병상 통치 등 대내 정세와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소외 등 소강상태를 나타내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통일외교는 지지 획득과 한계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점진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었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였

⁵ "한·러 정상회담 결과 문서," 1994년 6월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한·러 공동선언' 전문, 주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rus-moscow.mofa.go.kr>> 참조.

으며, 이를 위해 주변국들의 협력과 지원 획득을 위한 노력을 중시하였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동북아 번영을 위해 주변4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러시아와의 관계는 1998년 7월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화 국면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잠재되어 있던 양국관계의 갈등요소가 표출된 것으로, ‘4자회담’에서의 러시아 배제 여파 등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기존의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옐친 대통령의 지지도 이끌어 내었다. 또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필요성 및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한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對한반도 통일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즉 냉전으로 단절된 한반도가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북한을 관통할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로 변화된 것이었다. 이는 시베리아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 한반도횡단철도(Trans Korean Railway: TKR) 연결사업, 북한지역 통과 가스관과 전력망 구축 사업 등 남·북·러 3각 경협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2000년 5월, 새로이 푸틴 정부가 출범했고, 동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⁶ 2001년 2월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등 균형 잡힌 對한반도 접근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는 푸틴 방한 시 발표된 ‘한·러 공동성명’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nti-Balistic Missile: ABM)과 연계된 사안에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한·미 갈등을 낮기도 하였다. 푸틴 대통

⁶ 당시 푸틴의 방북 목적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서동주, “푸틴정부가 북러관계와 對韓 파급 영향,” 『국제문제연구』, 제3권 제3호 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2003), p. 172 참조.

령은 2000년 2월 북·러 신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도 나섰으며, 2000년 평양에서, 2001년 모스크바에서, 2002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김정일과 연례적으로 회담하는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한반도 통일 외교도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협력에 정책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⁷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모스크바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열고,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한·러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또한 주변국에 대한 ‘실용주의적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러시아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전보다 중시하였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6자회담을 통한 이의 해결에도 적극 나서게 되었다.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 사태 시, 러시아가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시 기 한·러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구축, 정상회담의 정례화, 행동계획(action plan)의 채택 등 외교·안보 부문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노선을 계승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축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와 한층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해 내려 하였다.⁸

⁷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p. 23.

⁸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서울: 청와대, 2009), p. 25.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룩하였으며,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테러, 국제환경,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도 함께 다뤄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러는 차관급의 전략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수의 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북한 핵문제에의 정책 공조도 실천해 나갔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2차, 3차 핵 실험과 관련해 북한을 비판하면서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 2087호, 2094호 채택에도 적극 나섰다.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 KRD)를 출범시켜 지식외교의 측면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기동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을 안보, 대북정책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어 11월 12~13일에는 푸틴이 방한하였으며 비자면제협정 등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등 향후 한·러 양국 간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에 대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통일의 교를 전개함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통일과정에서의 후원자 및 통일한국에의 우호 세력으로 만드는 것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나.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한반도 통일관련 외교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북정책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간 연계 접점을 찾아내고, 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한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탈북자 등에 대한 정책 공조 모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중 가장 핵심적 사안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감 을 갖고, 6자회담 및 외교적·평화적 수단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4자회담이 아닌 한반도 현안예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6자회담을 선호하였으며,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규율을 중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결의안 2087호·2094호 등 채택에도 적극 나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가운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 제고를 이끌어 내려 하였던 것이다.

둘째, 주로 한·러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외교는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고, 공식적 외교안보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즉, 한·러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러 간 정책 조율을 이끌어 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도 도출해 내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김영삼 정부는 1994년 모스크바 공동선언(7항)에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한·러 공동성명(7항)과 2001년 한·러 공동성명(7항)에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한·러 공동성명(5항)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한·러 공동성명(9항)에서 각각 러시아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비록 한국의 대북정책은 각 정부마다 다소간의 차이점을 나타내었지만, 전체 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 통일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일관된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

II

III

〈표 II-1〉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통일·안보 관련 공동성명 내용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노태우-고르바초프 (1990.12)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 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남북한 간의 총리회담을 포함한 남북 접촉의 확대를 환영하고...
노태우-옐친 (1992.11)	(6항)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남북한 간 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김영삼-옐친 (1994.6)	(7항) 한반도 정세 토의 과정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평화구축 및 안보와 안정을 위하여 남북대화의 지속이 필요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대중-옐친 (1999.5)	(7항)···(중략)···러시아 측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 간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김대중-푸틴 (2001.2)	(7항)···(중략)···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 측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계속 기여하고자하는 의지와 의지를 표명하였다...
노무현-푸틴 (2004.9)	(5항) 양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화해 및 협력 증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내 안정, 안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러시아 측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박-메드베데프 (2008.9)	(9항)···(중략)···한국 측은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으며, 러시아 측은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러시아 측에 설명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협력을 지지함을 확인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출처: 주러 한국대사관, “한·러 정상회담 결과 문서(2012년 현재),” <<http://rus-moscow.mofa.go.kr>>.

셋째,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가운데 대러 외교가 추진되었다. 러시아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강조하였으며, 외교적으로는 남북한 등거리·균형 접근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 데에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는 방향과도 연계되었다.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틀로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강조하였던 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안보 현안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넷째, 통일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군사안보적 사안을 뛰어넘어 TSR, TKR 연결사업, 북한통과 가스관 연결사업 등 남·북·러 3각 경협과 같은 지경학적 요소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는 한·러관계의 전방위적 발전과 증진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었다.

다섯째, 러시아가 대외정책 기조 중 중요하게 여기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에서의 규범 준수를 염두에 두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UN 안보리의 역할을 중시 여겼으며, 이에 따른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최근 탈북자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규범에 따른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가시적 협력 효과를 도출한 바 있다.

여섯째, 역대 정부별로 對러시아 통일외교 콘텐츠 부문에서 지속과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김대중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 주요 콘텐츠는 남북정상회담, 대북포용정책 지지 획득, 4자회담 부정적 여파 극복, 남·북·러 경협사업 현실화 등으로 집약된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평화번영정책 지지 확보, 정상회담 정례화 및 행동계획 채택 등 한·러관계 증진, 6자회담 공조, 남·북·러 경협사업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한·러관계 격상,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지지 획득, 한반도 비핵화 공조, 지식 외교 기반 구축, 남·북·러 경협사업 현실화 등으로 집약된다.

전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점을 나타냈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반면에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한·러관계 증진, 남·북·러 경협사업 추진 등의 측면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입장 역시 견지되고 있다.

끝으로, 최근에는 러시아가 ‘루스키 미르 재단(Ruskiy Mir)’을 출범시키는 등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경향에 맞추어, 한국 측의 대러 공공외교도 그 폭과 내용 측면에서 더욱 풍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가장 긍정적인 사고와 정책적 입장을 가진 나라임을 염두에 두고, 향후 통일한국의 출현과 관련해 러시아의 진정한 협력과 지원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양국 간 수교 이후 지난 23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경험을 쌓아왔다.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수교 초기 단계에서, 지나친 기대의 거품이 사라지는 일종의 정체 기간을 거쳐, 현재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단계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불발, 급부상한 중국의 막강한 위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크게 축소된 러시아의 위상, 한국인들 사이에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고정적 인식 등은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미래에서 러시아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통일외교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는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러시아는 ‘생산적 협력 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TSR과 TKR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과 같은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러 삼각협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유지 및 통일관련 분야에서의 한·러 양국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對러시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 국민의 한국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수준, 우리의 對러시아 공공외교 특히 통일관련 공공외교 현황, 그리고 이러한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1) 러시아 국민의 對한국 인식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한국을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극동의 작은 문화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이미지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작가 곤차로프(Ivan Goncharov)의 한국 여행기, 가린-미하일로프스키(Nikolaj Garin-Mikhailovskii)의 한국 민담, 한국을 여행한 저명한 일본 전문가인 콘라드(Nikolaj Konrad)의 한국에 관한 기록 등⁹에 의존하고 있

⁹ 러시아의 저명한 작가 Ivan Goncharov(1812~1891)는 일본, 한국, 중국을 전함 팔라다호를 타고 여행한 후 1858년 기행문집 『전함 팔라다(Fregat Pallada)』을 발간했으며, 작가이자 탐험가 Nikolaj Garin-Mikhajlovskij(1852~1906)는 한국 북부와 만주 및 요동 반도를 여행한 후 1899년 기행문 『한국, 만주 및 요동반도 여행기(Po Koree, Manchurii, i

다. 1884년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에 위치한 이국적인 나라였으며, 러시아의 일부 개척자들은 한국 땅에 들어와 자신의 영지를 마련한 사례들¹⁰도 있었다.

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전통적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공산권 종주국으로 북한 정권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소비에트 시대에는 러시아인 절대다수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인식했다.

한편, 해방 후 북한 정권의 수립 당시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온 북한과는 이념적 동질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육로를 통한 북한과의 직접적 교류가 가능했던 극동 지역 러시아인들에게 북한이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1990년 한·러 수교를 기점으로 이 같은 고정 관념이 사라지고 러시아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련 시절에 교육을 받은 러시아인들 의식의 기저에 형제 국가로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정서적 친밀감과 남한을 조심스레 대하는 자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Liaodunskomu poluostpovu)』를 발간했고 한국 여행 중 채집한 민담들을 1899년 『한국 민담집(Korejskie rasskazy)』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러시아의 저명한 일본 전문가인 Nikolaj Konrad(1891~1970)은 한국 방문 시 관찰한 삶의 양식과 풍속 등을 자세히 기록한 문헌을 남겼으며, 그 내용은 1996년 『미발간 연구와 서간문집(Neopolikovannye raboty. Pis'ma)』으로 발간되었다. 이와 같은 책들은 수교 이전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삶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

¹⁰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Valerij Iakovskij(1911~2010)는 1922년 북한 지역으로 이민하여 1944년 까지 호랑이 사냥을 하면서 원산 인근에 사슴 농장을 운영했으며, 북한 정권 수립 후 러시아로 귀환하여 『눈이 네 개인 포수(Nenuni-chetyrekhglaznij: povest』(1979), 『호랑이, 사슴, 인삼(Tigr, olen', zhen'-shen')』(1984), 『한국(Koreia)』(2003) 등과 같은 흥미로운 소설 및 에세이를 발표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졌으며, 러시아에서 누리는 한국 상품의 브랜드 가치 등에 힘입어, 최근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아주 높아졌다.¹¹ 또한 한국 상품의 이용률도 러시아(93.1%), 중국(84.4%), 프랑스(60.2%), 독일(51.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해본 한국 제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러시아 레바다 첸트르(Levada Center)에 의뢰하여 실시한 ‘러시아 내 한국문화 인지도 및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에게 한국과 연상되는 대표적 이미지로 음식(48.3%), 서울(40%), 분단국가(31.5%), IT 기술(30.1%), 휴대폰(29.3%), 자연(26%), 불교(25.5%), 올림픽(24.9%), 한국전쟁(23.1%), 북핵문제(20.4%), 한국 기업(17%)¹²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우리는 러시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들이 주로 분단 현실, 한국전쟁, 북핵문제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과, 한국산 전자 제품들에 대한 호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레바다 첸트르에 의뢰한 ‘러시아 여론의 한국에 대한 인식’ 사례연구 보고서는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주요 이미지들이 일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한국, 한국인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자동차(27%), 핸드폰(24%), 가전제품(18%), 컴퓨터 기기(16%) 등 한국 상품이 압도적이었으며, 2007년 조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¹¹ 2012년 3월 5일 조선일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세계 10개국 대상 국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러시아(57.5%), 중국(53.9%), 일본(40.1%), 미국(39.5%), 독일(25.4%), 영국(29.1%) 순서로 러시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¹² 한국외국어대 연구산학협력단, 『러시아 문화교류 기초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수탁 과제), p. 115,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71000-200900060>.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한국음식(23%), 분단국가(19%), 한국전쟁(10%), 서울(9%) 등¹³은 순위와 비중이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에 관한 이미지는 러시아인들이 직접 사용해본 한국 산 제품에 대한 호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정치 상황,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의 비중이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러시아인들이 한국 상품 이외에 한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 국가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치 상황, 경제력, 역사와 문화전통, 대중문화 등이 골고루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측면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다는 점은 향후 對러시아 공공외교 방향 설정 시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러시아 국민의 통일관련 對한국 인식

앞에서 언급한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상황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이해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있다. 분단 체제에서 남북한 양측의 갈등과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피상적 정보는 알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의 상당수 특히 유럽 지역 거주 러시아 보통 사람들은 남북한 양쪽의 현실에 대해서는 인식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레바다 첼트르의 조사 결과에서 러시아인 중 ‘한국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답한 비율이 1%에 불과하고, ‘한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지만,

¹³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рия Левады, “Отчет 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Образ Коре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россиян,” (Moskva, 2013), p. 6.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답이 14%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그다지 관심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답변과 ‘한국에 대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으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답변은 각각 37%와 48%¹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짧은 기간 안에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신화를 이룩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의 주요 관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 정치 상황, 더 구체적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가 ‘북한 지도층’, 4%가 ‘한국 정부’, 10%가 ‘중국 지도층’, 그리고 24%가 ‘미국 지도층’에 있다¹⁵고 답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축구 경기를 할 경우 어느 쪽을 응원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한국 응원’이 15%, ‘북한 응원’이 8%를 기록했고, 78%는 응답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 남북한 문제에서 러시아는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지지가 1% 그리고 한국 지지가 7%¹⁶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서 우리는 한반도 갈등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남북 양측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보다는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주

¹⁴ Ibid, p. 4.

¹⁵ Ibid, p. 11.

¹⁶ Ibid, p. 13.

고 있다.¹⁷

수교 직후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가 대 북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처럼 한국 쪽으로 경도되었던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은 2000년 조·러 우호조약 체결과 같은 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 후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한 주도하의 통일 가능성과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발표되었다.

2010년, 당시 루스키 미르 재단 사무총장 니코노프(Viacheslav Nikonov)가 책임을 맡고, 톨로라야(Georgij Toloraia)가 편집을 담당하여 발표한 “한반도: 러시아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¹⁸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한·러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2011년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이하 IMEMO)의 딘킨(Alexander Dynkin) 소장이 책임 집필한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에서는 남한 주도 하에 통일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통일한국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에 긍정적 영향을

¹⁷ 엄구호, “서로에게 매력적인 국가를 만드는 공공외교: 러시아의 한국 이미지와 대러 공공외교 방향” 『인문외교가 중요하다』 (한국슬라브학회 기획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13.10.1.) 참조.

¹⁸ V. Nokonov, G. Toloraia, A. Vorontsov eds., *Koreiskii Poluostrov: Vyzovy i Vozmozhnosti dlia Rossii : Kollektivnyi Doklad Ekspertov dlia Rossiiskogo Natsional'nogo Komiteta Aziatsko-Tikhookeanskogo Soveta Sotrudnichestva po Bezopasnosti (ATSSB)*, Collective expert report for the Russian National Committee of the Asia-Pacific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CSCAP) on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Moscow: MGU, 2011).

미칠 것이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통일한국은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외교력을 제고하고 지역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협력 파트너가 될 것”¹⁹으로 예측했다.

서로 대척점에 위치한 이 두 연구 결과는, 현대 러시아 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연구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들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그룹 이외의 소장 학자들 중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3년 레바다 첼트르 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러시아인들은 한국인과 북한 사람의 민족적 특징에 대해 평화 애호적 태도, 환대,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약간 앞서는 반면, 신뢰성은 오히려 북한 사람이 약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⁰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일반적 예상과 달리 한국과 북한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러시아인들이 민족 특징상의 차이점을 별로 느끼기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는 북한이, 그리고 북한의 이미지에는 한국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체적으로 소련 체제를 경험한 노년층 러시아인들이 과거에 대한 노스탈지어 때문인지 친북한 성향을 보이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해 큰 호감을 갖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러시아 청소년층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K-pop 열기도 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긍정적

¹⁹ 알렉산드르 딘킨, 김현택·이상준 역,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서울: 한국외대 출판부, 2012), pp. 394~397.

²⁰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рия Левады, “Отчет 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Образ Коре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россиян,” p. 15.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기보다는, 러시아에 확산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
를 바탕으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호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러시아
일반 국민에게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나 통일 등의 문제는 불분명한 모습으
로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인들의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한국인과의
직접적 교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도 이 같은 인식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2014년부터 발효 예정인 비자면제 협정은 러시
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또 그 결과 장차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
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TV 매체²¹
를 꼽은 반면에, 러시아어로 제공되는 한국 관련 정보가 극히 미미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매스미디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또 하나의 매체는, 러시아 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사용되는 현대사
교과서들이다. 남북 분단 상황의 역사적 기원과 현실, 남북한 체제에 대한
비교, 동북아 평화체제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 등이 객관적, 체계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중요

²¹ 정전 60주년에 즈음하여 러시아의 TV 채널 쿨리투라에서 제작 방영한 “두 개의 한국: 38선” 제목의 프로그램(2013.5.15. 방영)은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진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남북 분단과 현실을 체계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참석을 앞두고 러시아 저명 언론인의 TV 인터뷰가 러시아 TV를 통해 방영되어 한국의 현실을 러시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했다.

한 과제 중 하나이다.

(3) 러시아 국민의 한·러시아 협력 인식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인접한 나라의 수가 워낙 많고, 또 한국이 위치한 극동지역이 최근까지 오랫동안 러시아의 정치·경제·문화의 주변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러 협력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수준은 높지 않다. 또 동북아 지역의 두 강국 중국과 일본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러시아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시장에서 최고 브랜드로 자리 잡은 한국 상품들에²² 힘입어 러시아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러시아인들에게 경제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경제적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2007년 4월 소셜 오피니언 펀드(Social Opinion Fund)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근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 중국, 인도가 각각 26%, 21%, 16%를 차지한 반면, 북한과 한국은 각각 3%와 2%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 2009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러시아에게 가치 있는 파트너” 조사에서, 중국은 12%, 일본이 6%를 얻은 반면, 한국은 0%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²³ 이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우리는 아직 믿을 만한 협력 파트너로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셈이다.

²²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호텔, 오리온 초코파이, 팔도 도시락 라면 등이 대표적이다.

²³ 엄구호, “서로에게 매력적인 국가를 만드는 공공외교: 러시아의 한국 이미지와 대러 공공외교 방향” 참조.

2013년 레바다 첼트르 여론조사에서, “한·러 양국의 협력 증진 가능 분야”를 묻는 질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경제(44%), 문화(39%), 안보(34%), 천연자원 개발(30%)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 선진국 한국의 이미지가 분명히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러시아인들이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우리가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자주 언급하는 자원 개발 같은 분야가 문화 및 안보 분야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것은 예상 밖이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대표기업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의 위상이 아직 미미하다는 현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양국 관계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수교 이후 20여 년 동안의 시간이 러시아인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뚜렷이 투영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촉발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심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양국 간 협력의 다변화 및 고도화가 요구되지만, 우리가 아직 이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모스크바의 주요 서점에 가면, 중국 및 일본 관련 서적은 학술 및 문화도서와 대중적인 책자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서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반면, 한국 관련 책자는 한국어 회화 편람, 여행가이드 북 등이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년 8월 한국을 방문한 가타로프(Gatarov) 러시아 상원의원이 양국 관계의 현황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아무런 갈등이 없긴 하지만, 서로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와 같은 그런 관계이다. 대부분의 러시아인은 ‘한국’하면 삼성, 현대, LG, 88올림픽, 분단국가를 떠올리는 정도다.”²⁴라고 말한 것에서도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²⁴ 『중앙일보』, 2013년 8월 18일.

다행히 2012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인들의 극동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한·러 양국 국민 간 상호 협력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양국 간 단기 방문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고, 인천에 있는 바라그 호 기념비²⁵를 방문하는 러시아 중등 및 대학생 대상 ‘애국 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는 터여서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한국과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과 교류를 쌍방향 소통과 교류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러시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문화 예술계의 파트너들과 상호 협력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국의 문화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각별하지만, 동시에 타국의 문화 예술에도 관심이 많은 러시아인들의 문화 예술관이 우리와 사뭇 다른 것도 기억할 점이다. “신명나는 무대를 한 판 벌리는 것”을 우리가 문화 예술이라고 느끼는 것과 달리, 러시아인들은 “타자의 문화 예술을 공감할 때야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기”²⁶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학 연구 전통의 소중한 결과물인 20권의 한국 중세문화 번역 작품과 우리의 한국문학번역원이 지원

²⁵ 러·일 전쟁 당시 제물포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게 투항하는 대신 전함 바라그 호와 함께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길을 택한 러시아 해군들에 관한 이야기는 러시아 역사 교과서에 대표적 애국심의 발현 사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많은 러시아인들은 한국 방문 시 인천 연안 부두에 위치한 바라그 호 기념비를 방문하고 있다.

²⁶ 한·러 수교 20주년 행사의 예술 감독을 맡았던 단국대학교 함영준 교수가 당시 개최된 한·러 문화 포럼 토론회에서 구두로 발표한 내용.

발간한 총 60여 권에 달하는 현대 한국문학 작품이 러시아 독자들로부터 거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일방적 문화 교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좋은 문학 작품이 독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상 독자의 관심과 취향을 고려한 작품 선정,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번역, 경험 많은 편집인의 원고 수정, 역량 있는 출판사를 통한 출판, 효과적 홍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러 양국 교류 및 협력의 유형은, 대화(dialogue)나 협동(collaboration)보다는 독백(monologue)²⁷의 형태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교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양국 국민에게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독백에서 대화로, 그리고 대화에서 협동으로 공공외교의 방향을 다변화하고, 협력의 성공 사례들을 배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나.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1) 목표

러시아는 한반도의 주변4강 중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통일공공외교의 측면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통일공공외교의 최대 목표는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과 부합하며 역대

²⁷ Geoffrey Cowan과 Amelia Arsenault는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세 층위로 독백, 대화, 그리고 협동을 들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이 갖는 효과를 적절히 배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프리 코윈, 니콜라스 켈 역음, 최영중 감수, 『새 시대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서울: 인간사랑, 2013), pp. 20~47.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지름길임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출현을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하는데 있다.

요약하면, 러시아에 대한 통일공공외교의 목표는 “우리 정부와 민간 분야가 상호 협력하여, 한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러시아 국민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방적 메시지의 발신이 아닌 쌍방향의 열린 소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핵문제가 포함된 러시아에 대한 통일관련 공공외교 차원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국민들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저해요소로서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데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적 공조를 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바람직하며 극동시베리아 지역 발전에의 기여 등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분단 상황, 이산가족의 비극, 탈북자 문제 등 인권안보의 측면에서 러시아 국민 및 여론 주도층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북핵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나서게 하는데 있다. 끝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해 증진과 정책 공조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동력을 창출해 내는데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유라시아 강대국인 러시아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당사자이다. 특히 미국,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어서, 우리에게 ‘생산적 협력세력’으로서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I

II

III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약한 것은 분명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개방 및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남·북·러 3자가 참여하는 경제협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나라임에 분명하다.

러시아는 한·러 수교 직후 한국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균형 노선을 선택하는 실용적 외교로 선회하였다.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러 양국 정상회담에서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은 이 지역(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선적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며, 우리는 여러 방향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²⁸고 화답한 것은,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한 ‘생산적 협력 세력’인 러시아에 한국의 대북정책의 기초를 명확히 제시하고, 러시아인들에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서 한반도가 갖는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러시아인들을 향해 발신하는 대신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주도하의 통일이 러시아의 미래에 갖는 의미를 설득하는 대화형 소통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경험이 있는 러시아로서는, 자신들과 과거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에 편향되어 있다고

²⁸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Кын Хе,” 크렘린 홈페이지 <www.kremlin.ru/transcripts/19170> (검색일: 2013.9.20).

생각하는 한국의 입장을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지렛대로 대하기보다는, 한·러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들의 실천을 통해서,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한국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수교 이후 23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양국이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 쌓아온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일종의 소강상태를 경험하던 양국관계가,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다. 한국 상품의 러시아 시장에서의 약진, 자동차 및 전자 제품 공장의 러시아 진출 같은 경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양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산 상품을 통해 러시아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우리에게 대한 우호적 태도를 외교안보와 문화 교류 그리고 관광의 활성화 등의 영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 주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주체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정부와 국가기관의 ‘트랙1,’ 공공기관과 국책연구소의 ‘1.5트랙,’ 민간의 ‘트랙2’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對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국회, 미디어, 국책연구소, 기업, 대학 부설 연구소, NGO 및 개인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I

II

III

〈표 II-2〉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주체

영역	주체	
트랙1 (정부, 국가기관)	정부	통일부, 외교부(주러 한국대사관, 3개 총영사관, 지방정부 (인천시, 강원도, 부산시 외))
	의회	한·러의원외교협의회, 국회의원
	국가기관	주러 한국문화원, 주러 한국교육원(4곳), 민주평통 외
1.5트랙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관광공사, KOTRA, 한국문학번역원 외
	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외
	미디어	KBS 라디오 국제방송, KBS World, 아리랑 TV
트랙2 (민간)	학계, 연구소	한국슬라브학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소,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경희대 환동해권연구소, 배재대 시베리아연구소 외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외
	민간 교류단체	한·러대화(KRD), 한·러교류협회,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 삼일문화원, 원광문화원 외
	개인	한국민, 고려인

우리의 對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체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는 달리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간 교류 역사가 길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던 국제정치적 입지의 약화, 중국의 막강한 정치·경제적 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된 러시아의 이미지, 소련 붕괴 직후 한국인들이 러시아 여행에서 사회의 혼란상을 목격하면서 갖게 된 부정적 시각의 고착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

자연히 트랙1과 1.5트랙 부문인 우리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러시아를 향한 공공외교의 노력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트랙2의 민간 분야 활동 주체들도 일시적 활동 이후에 대부분의 조직이 소멸되는 상황이 전개되었

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는 지속성을 갖고 유지되는 반면, 유독 러시아와의 의원외교는 중요 행사 때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급조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 간 의원 친선협회의 한국 측 회장이 주로 야당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국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양국 관계를 모니터링하면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진 의원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현지에서 공공외교 및 문화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주요 기관으로는,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주재 3개 총영사관, 모스크바의 한국문화원 블라디보스토크 한국문화원, 로스토프 나 도누,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위치한 4개 한국교육원 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사무소,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 KOTRA 모스크바 지사와 극동 시베리아 주요 도시에 위치한 사무소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외교 주체들은 자체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한국 관련 정보의 확산, 한국 관련 다양한 문헌과 자료의 배포, 문화 및 예술 활동 후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러시아 지방정부와 자매 또는 우호관계를 맺은 사례는 2008년 기준으로 총 33개에 달하며, 그 중에서 인천시와 부산시 그리고 강원도 등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블라디보스토크 시, 연해주 정부 등과 각각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對러시아 공공외교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학번역원 등이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대표적 공공외교 수행 기관으로 한·러포럼 개최, 러시아 내 한국학 지원, 유력인사 초청, 러시아 교육자 대상 세미나, 문화계간지 코리아나(Koreana)의 러시아어판 발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을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선정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러시아 여러 대학에 한국학 교수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의료 관광에 역점을 두고 러시아 환자들의 한국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 관광 안내 책자를 러시아어로 제작 배포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한국 문학 번역 전문가 양성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금까지 총 60권 이상의 한국 문학 작품 번역을 지원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출판했다.

국책연구소로는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 내 한국전문가 초빙, 공동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학자 파견 교류, 관련 도서 출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KBS 라디오 국제방송이 한국 관련 뉴스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러시아어로 방송하고 있으며, 영어 번역과 함께 방송되는 KBS World와 아리랑 TV 채널 등은 러시아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트랙2에는 러시아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각 대학의 부설연구소,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 한-러 간 민간 교류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對러시아 공공외교 수행 주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대학부설 연구소들이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고려대 러시아 CIS연구소,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경희대 환동해권연구소, 배재대 시베리아연구소 등은 러시아 학자들을 초청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러시아 현지 주요 학술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지식 교류 공공외교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는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25회째 연속 개최하여, 양국의 대표적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루는 정기적 채널을 구축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문화단체에 대한 후원, 우수 현지 직원의 한국 초청 사업 실시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모스크바 법인이 러시아의 톨스토이 재단과 협력하여 제정한 ‘야스나야 폴라나 문학상,’ 볼쇼이 극장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는, 외교통상부 소속 사단법인 한-러교류협회, 지식경제부 소속 사단법인 한-러비즈니스협의회(Korea-Russia Business Council: KRBC) 등이 있으며, 특히 한-러비즈니스협의회는 한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러시아 지방정부의 사절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문화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 관련 주요 학술도서의 번역 출간을 지원해온 모스크바의 삼일문화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모스크바의 원광문화원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對러시아 공공외교 수행 주체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 영역의 활동은 부족한 형편이다. NGO나 개인 중심의 블로그 활동이 미미한 가운데, 對러시아 공공외교 활동은 국내 주요 대학 연구소와 몇몇 사단법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주체들의 다변화, 수의 확대, 여러 주체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미디어 분야에서 러시아어로 제작된 콘텐츠의 빈곤 현상 때문에 현지로 발신 가능한 한국에 관한 메시지 자체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3) 자원 및 자산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통일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질 수 있는 자산은 경제발전 경험과 IT 기술이 포함된 지식자산, 문화예술과 한류 등의

소프트파워 자산, 관광 및 인적 자산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對러시아 공공외교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은 분단 상태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경험’이다. 특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수준의 기업을 일궈낸 우리의 경제 발전 사례는 러시아에게는 흥미로운 벤치마킹 대상이다. 창의적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 현대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러시아는 전자 정부, 감사제도, 혁신 클러스터 구축, 교통 시스템 구축, 식품 안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한국에 파견하여 연수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유럽의 선진국 위주로 해외 연수단을 파견하던 러시아가 우리의 경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책과 제도 등이 러시아에 전수 되는 과정에서 통일공공외교는 상당한 위력을 갖고 발휘될 수 있다. 이 분야의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측 인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우호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며, 한반도 안보 상황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의 제도와 노하우가 러시아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국가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련 소프트웨어나 장비의 수출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 지방 정부들과의 협력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

문화 예술 자원의 경우, 러시아와 오랜 교류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수한 한국 상품 덕분에 형성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IT 강국인 한국을 특징짓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개발과 환경 보존의 조화 같은 요소들은 일본, 중국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한국 관련 동호회²⁹ 등장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대도시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한 러시아 내의 한류는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 거주 러시아인들의 한국 방문과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러시아 학생들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화 경험을 축적한 한국 대학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의료 관광객의 숫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한된 국제선 항공편 때문에 일정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 관광객도 2014년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될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2012년 APEC 정상회담 이후 인천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정기 항공편이 대폭 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극동 시베리아의 다른 도시로 확산될 경우, 한국은 관광지로서도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對러시아 공공외교에서 우리는 경제 발전 경험, 정책과 제도, 문화 예술과 한류,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소프트파워 자산을 갖추고 있다. 과거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한국이 점차 러시아의 가까운 이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러시아인들에게 막연한 경제 선진국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한국이 그들에게 유익한 협력 파트너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관광 사업 이외에, 양국의 근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유적과 장소를 두

²⁹ K-pop 동호회, 한국 드라마 동호회, 초코파이 클럽, 한국어 학습자 동호회 등이 있다.

나라 청소년들이 교차 방문하는 것과 같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테마 여행 프로그램들을 정부 차원에서 착수해야 할 것이다.

(4) 매체

對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요 매체로는 전통적인 형태의 회의체, 인적교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목표 대상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공간의 활용, 상호 협력형 쌍방향 교류 모델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對러시아 공공외교 활동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매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회의체의 운영 방식이다. 국제교류재단이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한·러포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가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 개최해온 학술회의,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러 대화(KRD)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러시아 측 전문가를 초대하거나,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각종 포럼(발다이 포럼,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야로슬라블 포럼, 크라스노야르스크 포럼, 바이칼 포럼 등)에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나 세미나에는 행사의 비중과 관계없이 우리 측에서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미흡한 러시아의 여론주도층과 청중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의 지속적 대화 통로를 마련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 교육아카데미가 공동 주관하여 한국에서 연수 과정을 진행하는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세미나,’ 언론재단 주관의 러시아 언론인 한국 초청

연수 사업 등이 이 같은 사례에 속한다. 한편, 국제교류재단은 직접적인 인적 교류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대학이 러시아의 대학과 협력하여 다수의 러시아 수강생이 온라인으로 한국학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KF e-school 제도 같은 새로운 협력 유형을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원과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학 강좌는, 강의 담당 교수의 부족으로 개설하지 못했던 수준 높은 한국학 과목을 러시아 현지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개념 지식외교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개개의 한국학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례도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러시아 주요 고등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학 컨소시엄 RAUK(Russ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Korean Studies)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러시아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한국학 관련 학과들이 구축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유 교환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 매체도 등장했다. 토지문화재단은 2012년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외국작가 중에서는 최초로 러시아 여류작가 류드밀라 울리츠키야(Ludmila Ulitskaya)를 선정·수상하여, 이 작가의 작품집을 번역 출간했다. 이전의 양국 간 문학교류가 상호 방문과 강연회 위주의 소통 방식에 머물러 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제정된 문학상을 매개로 러시아 작가와 한국 독자가 긴밀한 교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문학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술분야의 협력도 진화하여, 2012년 초에는 러시아 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IMEMO) 연구소에서 발간한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연구서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번역 출간하고, 이 책이 개진하고 있는 남한 주도 하의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학술회의도

I

II

III

개최했다. 201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러시아 명화집 한국어판 발간 기념행사”는 한·러 양국의 기업이 협력하여 문화 교류의 새 장을 마련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했다. 양국의 대표 국영 기업인 가스프롬(Gazprom)과 한국가스공사(Korea Gas Corporation: KOGAS)가 공동 재정지원하여, 러시아의 주요 박물관 소장 명화들을 『러시아 황금지도』라는 제목의 한국어 화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에 러시아의 저명한 연주단체 라흐마니노프 트리오를 초청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활동은 과거 한 쪽이 자신의 문화와 예술을 일방적으로 소개 전시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양국 기업이 초기의 기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여 문화 콘텐츠를 제작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협력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 내에서도 대중 시위를 주도한 나발리니(Alexei Navalny)와 같이 파워 블로거가 등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는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러시아 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대한 접근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대상

우리의 對러시아 공공외교가 회의체 운영 및 포럼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관심의 대상은 러시아 정부 인사, 학자 등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연례 학술 대회, 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가 공동 주관 해온 한·러포럼, 외교안보연구원이 IMEMO·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GIMO)과

공동 운영하는 정기 학술대회 등에 참가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교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대학 부설 러시아 연구소 등이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러시아 학자들의 수도 최근 증가하고 있고, 전공 분야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2010년에 시작하여 2회까지 개최된 한·러 대화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그룹이 참석하고 또 폐막행사에 양국 정상에 참석함으로써 러시아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 중 유독 러시아와 의회 차원의 교류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출범한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그리고 러시아의 연방상공회의소와 산업기업가연맹의 공동주관 하에 2012년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사단법인 한·러 비즈니스협의회가 발족되어 러시아 기업인들과 한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러시아 지방자치 단체들이 한국과 협력하는 상설 통로로 기능하면서 인적 교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국학 연구자들 대상의 경우, 국제교류재단의 주도하에 구성된 러시아 한국학 컨소시엄(RAUK)을 통해 한국학 관련 지원 및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러시아 한국어교육자협의회 주관 학술대회, 학문후속세대 대상 학술대회 등이 개최되어 학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이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세미나에는 특히 러시아 중등학교의 사회 및 지리 교과서 집필진들이 참여하여, 한반도 상황 및 남북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언론재단에서는 매년 일정 숫자의 러시아 언론인을 초청하여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러시아 대중 매체

에 한국 관련 보도와 기사가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한·러대화 사무국에서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 한·러 대학생대화,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국내 체류 러시아 학생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한·러 대학생 대화 등이, 양국 협력의 전망과 문제점, 문화 간 차이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협력 및 교환 프로그램이 크게 미흡한 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러시아의 일반 대중들을 향해 한국 관련 정보를 발신하는 통로는 아주 제한되어 있다. KBS 라디오 국제방송의 러시아어 방송, 일부 러시아인들에게 시청이 가능한 Arirang TV, KBS World TV 등이 현재 활동 중인 매체들이다. 한국관련 정보를 러시아어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로는 관광공사의 한국 안내 사이트, 모스크바 한국문화원의 웹사이트, 러시아 측 운영자가 한국과 북한의 콘텐츠를 동시에 게재하는 ‘하나의 한국(Edinaia Korea, <<http://onekorea.ru/>>)’ 등이 고작이다. 국제교류재단이 발간하는 연간 잡지 코리아나의 러시아어 판이 웹진으로 서비스 되고 있지만, 러시아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영화 및 한류에 관한 블로그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2013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최대의 대중음악상 ‘무즈 TV 어워드’에서 한국의 싸이가 ‘올해의 세계 히트상’을 수상한 것도 러시아인들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對러시아 공공외교의 대상은 각종 회의와 포럼에 참가하는 소수 여론 주도층이 중심을 이루던 초기 단계에서, 교과서 집필자, 한국학연구자, 언론인 등으로 대상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양국의 상호 이해수준을 제고하고 또 미래의 한·러관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절실함을 감안할 때 그 규모와 활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어 장벽 때문에 러시아어로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러시아 일반 대중을 겨냥한 우리의 콘텐츠와 콘텐츠 발신 체계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이다. 특히 2014년 중 비자 면제협정이 발효되고 러시아인들의 한국 방문회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에 대해 잠재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단순한 여행 정보의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상황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을 상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다.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한국의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유형별로 보면 첫째, 러시아 국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일관련 공공외교(I형), 둘째, 러시아 국민에 대한 한국의 비정부단체의 통일관련 공공외교(II형), 셋째, 러시아 정부에 대한 한국의 비정부단체의 통일관련 공공외교(III형), 넷째, 한·러 양자 모두 반민반관의 혼합된 형태로 수행되는 통일관련 공공외교(IV형)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러시아의 경우 통일공공외교에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여기서는 공공외교 부문의 이해 제고 및 간접적인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지식·한국학 외교, 문화외교, 기업외교, 스포츠·관광외교 등을 중심으로 해당 주제 영역 전체를 다룰 것이며 주제별로는 정부 차원, 1.5트랙 차원, 민간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³⁰

³⁰ 이 부분은 청와대 <www.president.go.kr>, 외교부 <www.mofat.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크렘린궁 <www.kremlin.r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www.mid.ru>, 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ww.cikrf.ru>, Security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www.scrf.gov.ru>, 주러 한국대사관 <rus-moscow.mofat.go.kr>, 주한 러시아대사관 <www.russian-embassy.org>,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홈페이지 및

(1) 지식·한국학외교 추진 실태

(가) 정부 차원

지식외교는 지식 자산을 토대로 이뤄진다. 한국의 경우 분단, 전쟁, 대립, 경제발전, 민주화 경험에 근거한 가치, 제도, 정책 및 역할에서 프로그램을 모듈화하거나 한국의 독립 분야로 개발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회의체, 강연, 연구, 인적 교류, 교육 및 트레이닝이 포함된다.³¹

정부 차원에서의 가장 큰 지식외교는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 러시아 대학생과 현지 고려인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의 실상을 알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밖에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에서 러시아내 한반도 관련 유력인사를 초빙해 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한 것도 이에 포함된다. 주러 한국대사관의 경우 현지 체류에의 이점을 살려 한국의 통일과 대외정책을 알리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와 통일에 대한 여러 공공외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한·러의원친선협회의의 활동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들도 있다. 즉 러시아에는 정부가 후원하고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각종의 포럼 행사가 치러진다. 그 사례로 야로슬라블시가 주최하는 세계정책포럼

연차보고서 자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www.rus.or.kr>의 “Russia Report” (2011, 2012), 한·러대화 <www.e-krd.com>, 한·러교류협회 <korruss.org>, 각종 포럼, 학술 세미나 및 한·러 언론 보도, 유관 연구소의 정세 전망 보고서, 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함.

³¹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와 ‘통일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1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40~42.

에서의 외교적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즉 2010년 9월 러시아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2010.9.9~11)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기초연설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가 전개하는 공공외교 활동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참여한 사례에 해당하며, 이는 후일 민간 차원으로도 참여가 확대되었다.

민주평통의 경우 2013년 10월 제1차 한·러 평화통일포럼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과 한·러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의 대외, 대북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러시아 사회와 학생들에게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1.5트랙 차원

1.5트랙 차원 지식외교로 먼저 노무현 정부시기에 시작된 한·러 전략대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동북아시아위원회와 러시아의 전략센터(www.csr.ru)가 주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논의 주제가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동북아 안정과 평화 문제 등이었으며, 자연스레 통일공공외교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러 전략대화는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또 다른 형태의 지식외교 사례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러포럼’을 들 수 있다. 한·러포럼은 한국 측에서 한국국제 교류재단,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외교아카데미가 주관하였다.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국가별 포럼 중의 하나이며, 반민반관 교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형별로는 IV에 해당된다. 주로 쌍방의 러시아, 한국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 간의 대외정책을 논의하고, 양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I

II

III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자연히 한국의 통일정책, 한반도 정세, 러시아의 동북아, 대한반도 정책, 한·러관계의 평가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 큰 틀에서 보면 통일공공외교, 지식외교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참여하는 쌍방향, 상호 공공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정례성과 비교적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밖에 1.5트랙 차원의 미디어부문 지식외교로 한국언론재단 주관 하에 한·러 양국기자 상호 방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KBS 국제방송, KBS World, Arirang TV 등을 통한 러시아 시청자들에게 대한 접근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1.5트랙의 지식외교 대표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다. 국제교류재단은 설립 목적에 걸맞게 유력인사 초청, 차세대 지도자 교류, 교사 초청, 한국학 사업의 지원, 코리아나 러시아어판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해외인사 초청 사업 중 차세대 지도자 교류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국의 분야별 젊은 차세대 지도자급 인사들을 초빙해 인적 교류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연방하원의원,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회 의원, 러시아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공동소장, 러시아 ‘로스인뱅크’ 은행 수석 부총재 등이 초빙되었다.³² 미래 지향의 성격 속에 차세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러시아 교사 초청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참여한 러시아 측 교육자들은 한국 관련 사회 및 지리과목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중등 사회과 교사 대상 잡지에 한국관련 특집을 마련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한국 국제교류재단은 엘리트 교육 기관인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에 KF e-school

³² 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 사업 실적(1999-2012),” <www.kf.or.kr/kor/03_int/int_inf_iib03.asp>.

강좌를 개설하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 운영하며 신개념 지식 외교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 내 지한파 인사들 모임인 'Korea Society in Russia'가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토르쿠노프 총장을 중심으로 결성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한국학 외교는 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펼치고 있는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의 연계선상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관기관이 국제교류재단이며, 유형으로는 IV형에 해당된다. 한국학 외교의 전개 형식은 출판기념회 개최, 한·러 번역대회, 한국어 토포경진대회 지원, 한국학 워크숍, 한국어 펠로우십, 학회지원, 정책연구 지원, 한·러 e-school, 강좌 교류 지원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교류재단이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총 108명을 초빙해 '한국학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3년 여름에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에서 러시아교육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Education)와의 협력 하에 러시아교육자 15명을 초빙해 외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은 러시아 한국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주요 고등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학 컨소시엄 RAUK³³을 설립하여 한국학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소개 외국어저작물 출판지원³⁴이 있었으며, 러시아 주요대학의 한국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국어 펠로우십'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모스크바국

³³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모스크바국립대, 이르쿠츠크국립대, 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 국방연방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³⁴ 러시아어 저작물 출판 지원은 조순, 허승철 역, 『한국경제개발의 역학』(Kyiv city: Dmytro Burago Publishing House, 2012); Popova Liudmila, 『한국 개발과정에서 대외 경제적 요인의 역할(1950-2011)』(St. Petersburg: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Press, 2012) 등이 있다.

립대,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 톰스크 국립대학교, 카잔연방대학교, 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학교에 대한 한국어 펠로우십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사업의 성격상 특정 대학에 치우치지 않고 지원 혜택이 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한국학센터 학회 지원 사업으로 RAUK에 대한 한국학프로그램 지원이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 내 주요 싱크탱크와 국제교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관련 연구, 학술회의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하는 ‘정책연구’ 지원도 주목된다. 이를 테면 IMEMO의 “Twenty years of Russia-Korea Diplomatic Relations: Achievements and Prospects for Bilateral Cooperation and North East Asia’s Security”(2010년), “Prospects for North Korea’s Transformation: View of Moscow”(2011년)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한국-러시아 연계 KF Global e-School 강의 지원도 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서울대³⁵와 한양대³⁶에서, 러시아 측은 고등경제대와 극동연방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학 전공자들에 대한 교육 및 차세대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객원교수 파견을 통한 강좌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카잔연방대, 고등경제대, 이르쿠츠크국립언어대, 노보시비르스크국립공대에서 한국어로 하는 강의를 성사시킨 바 있다.³⁷ 끝으로 한국소개영상물의 러시아어판 제작 배포 사업도 이뤄졌다. 2012년에 이루어진 서울, 한국미술, 건축, 음식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Korean Style’이 대표적이다.

³⁵ ‘한국학입문,’ ‘동아시아 경제발전,’ ‘한국의 사회·문화전통,’ ‘한국의 산업과 기업’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³⁶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의 역사와 문화,’ ‘현대한국사회,’ ‘한국의 교육과 사회변동’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³⁷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 pp. 8~9.

한편 국제교류재단 이외의 부문에서 전개된 한국학외교로는 2012년 러시아에서 윤후명, 박 미하일 작가 출판기념회(10월)가 열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한·러 번역대회(10월) 및 한국에서 열린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경진대회 등도 이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외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지원 대상 및 분야의 다양성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민간 차원

민간 차원의 지식외교로는 한·러대화(KRD), 한국슬라브학회 등 학계, 민간교류단체, 개인 수준에서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지식외교는 비정부단체가 주관하고 이를 정부가 후원하는 형태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고려대와 상트페테르부르크대가 주관한 한·러대화(KRD)를 꼽을 수 있다.³⁸ 여기에는 한·러 양국의 대통령을 비롯해 민·관·산·학계의 주요기관 및 여론 주도층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양국 대통령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파급 영향 또한 컸다고 볼 수 있다. 조직 구조와 진행 형식은 ‘문화와 예술,’ ‘정치와 국제관계,’ ‘경제와 통상,’ ‘교육과 과학,’ ‘언론과 사회,’ ‘차세대 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별 합의 결과를 집약해 보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2010년에 시작된 제1차 한·러대화에서 다룬 주제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한·러 간

³⁸ 한·러 대화는 한·러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2010.11.9~11, 서울), 제2차(2011.10.31~11.2, 상트페테르부르크), 제3차(2013.11.12~13, 서울)까지 진행되었다.

협력 증진 방안'이었던 점에서 보듯이 지식자산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 강구에 초점에 두었다. 유형별로 보면 이는 III, IV형의 모습이 혼합된 특징을 띠고 있다.

이외에도 한·러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한·러 대학생 대화,' '금난 새와 함께하는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음악회,' '한·러 언론인 공동취재,' '한·러 국가녹색정책 전문가 워크숍,'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기념전시회' 등 양국 간 인사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의 모습도 지니고 있다.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이뤄진 대러 공공외교의 시금석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격상 한국 측의 노력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측의 호응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호 공공외교의 성격을 담고 있다.³⁹ 제2차 한·러대화(10.31~11.2)는 2011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치러졌다. 제3차 한·러대화(11.12~13)는 2013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하여 서울에서 치러졌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지식외교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것은 한·러 학계의 학술교류, 학술회의, 세미나 개최이다. 한국과 러시아 학자를 중심으로 각종 학술 세미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학술 행사를 갖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저명인사, 학자들을 초빙해 강연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 주로 대학교와 대학부설 연구소, 유관 민간, 기관 산하연구소 등이 주관하며, 지식외교 대상은 러시아 학자를 비롯한 여론 주도층, 지식인이 다수를 이룬다. 의제는 학술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통일외교와 연계된 것일 경우, 동북아 국제정세, 한반도정책, 남북관계, 한·러관계, 북·러관계 등이 주 의제를 이룬다.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치러진 학술 교류를 중심으로 그 내

³⁹ 한·러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U고대뉴스, "한·러대화 제1회 KRD 포럼 폐회식" <<http://www.korea.ac.kr/do/MessageBoard/ArticleRead.do?forum=kunews&id=4be44d>>, 한·러대화 공식홈페이지, <www.e-krd.com> 참조.

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술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슬라브학회의 활동이다. 한국슬라브학회는 동아시아·슬라브 유라시아학회(2010.3.4~5)를 비롯해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10.11.27) 등 슬라브 학계를 주도하면서 활발히 학술 활동을 전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는 “러시아의 한국인식 150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2010.6.4), “역사속의 한국과 러시아 - 상호인식과 이해”의 주제 하에 국제학술회의도 개최(2010.9.16~17)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전쟁, 휴머니즘을 말하다”의 주제 하에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러시아 영화제(제2회 Russia-Eurasia Film & Culture Readings)도 개최하였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원동문화개발기구조 9월에 “한·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 방안”의 주제 하에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는 10월에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의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러시아 지방연구와 한·러 지자체 교류”의 학술대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는 10월에 “역동하는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미래”의 주제 하에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유라시아연구소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11월에는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국동북아학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는 공동으로 “한·러수교 20주년과 동북아 평화” 제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한·러수교 20주년을 기념해 과학기술포럼(2010.10.28~29)이 모스크바에서 열렸으며, 한·러 문화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러 대화 사무국이 주관한 “2010 한·러 문화 축제의 의의와 전망” 제하의 한·러 문화포럼(2010.11.10)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러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학계에서는 국제학술회의 및 국내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학문 연구 활동 및 대외 지식외교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학술교류를 통한 지식외교를 펼치는 주체가 한국슬라브학회를

비롯한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등 러시아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점이다.

형태는 한·러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포럼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공동연구물의 발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러시아어 경진대회 등 다방면으로 양국 간 학술 증진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주제를 살펴보면 양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안에서부터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과 평화, 한·러 문화 증진 사업 등 전체적으로 보아 통일공공외교의 주제와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인문·사회·문화 부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통일외교와 연계될 수 있는 부문도 다루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술 교류 형태의 지식외교는 단기적, 일회성이 아니라 연례적이고 긴 시간 속에 지속성을 띠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러시아 고등교육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학생 교환 및 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APEC 이후 그 동안 한국에서 러시아의 변방으로 인식되던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지역 대학들과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연방 거점대학으로 지정된 극동연방대학과 북동연방대학은 전략적 집중 분야의 연구, 산학 협력, 교육 교류 등의 영역에서 한국 대학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 문화외교 추진 실태

(가) 정부 차원

러시아에 대한 문화외교를 펼치는 형태는 민간 수준에서의 교류가 다수를 이루며, 주러 한국대사관의 한국문화원에서 러시아 국민들 대상으로 한 문화외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I 형과 III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외교의 주체는 주러 한국문화원 등 러시아 소재 정부기관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러문화교류협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한·러교류협회(외교통상부 소관, 사단법인) 등 비정부단체 차원의 교류 활동도 활발하다. 이밖에도 반민반관의 기관과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과 단체 등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주러 한국문화원의 경우 한류와 한국문화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데 진력하고 있으며, 한·러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테면 2011년에 노보시비리스크, 하바롭스크 등 러시아 7대도시에서 K-pop과 한국영화를 접목한 시도로 7대도시 가을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비보이 팀의 러시아 투어, 김치버스 투어 등의 행사도 치러졌다. 또한 2012년에는 러시아 측의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 관련 프레젠테이션(3월) 지원, 한국영화 상영의 목요영화제, K-DRAMA Festival(6월), 금요 집담회, 한국단편영화제 K-Shots, 피아노 독주회, 모스크바 K-POP song festival(8월), K Plus 저널 창간(9월), K-Film Festival(10월) 등 각종 예술 공연과 출판 활동, 전시회를 열었다.⁴⁰ 해를 거듭할수록 장르와 활동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예술 문화를 적극 소개, 홍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 증진을 돕고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들어 한·러 모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외교에

⁴⁰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russia.korean-culture.org>>.

나선 점도 주목된다. 이를 테면, 2012년 10월 러시아에서는 사할린 주정부가 처음으로 ‘한인주간’을 선포하고 한인문화축제를 열었다. 그리고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시 2020 세계박람회 유치단’이 전남 여수시를 방문하는 (9월) 등 지방정부 간 교류가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 지사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탄생 380주년 기념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러시아 측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문화외교를 펼친 모습이기도 하다.

(나) 1.5트랙 차원

국제교류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 등 공공기관들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국제교류재단은 계간으로 한국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잡지인 코리아나를 발간하고 있다. 이 잡지는 러시아어로 정기 발간하는 유일한 인쇄매체로, 매회 1500부를 발간·배포되고 있다. 무료 웹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013년부터는 e-book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다. 러시아 측에 대한 문화지원 사업도 이뤄졌는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11년 4월 실시한 러시아 국립 동양박물관 한국실 재개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금년도의 경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야 아마추어 영화제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차세대 한국문학 번역 인력 양성을 목표로 일정 수의 러시아 번역가를 초청 교육하는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60권 이상의 한국문학 번역 작품을 현지 출판사를 통해 상업 출판하였다. 반면에 중국·일본 문학과 비교할 때 우리 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출판 및 유통 과정에서 다른 외국문학에 비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 민간 차원

러시아에 대한 문화외교는 역시 민간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에 전개된 가장 큰 문화외교 사례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치러진 ‘문화축전’을 꼽을 수 있다.⁴¹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러시아문화부가 공동 주최하였고 한·러교류협회(www.koruss.org)의 한·러 문화축제 지원 활동도 이뤄졌다. 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주관하였지만, 실질적 행사 내용은 민간이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내용 측면에서는 문화적 측면이 강조된 가운데 포럼, 회의, 교류 등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세부적으로 “어울림으로 함께 두드림”이라는 주제 하에 세계일류한국상품전(5.20~23, 모스크바), 에르미타주 한국유물 5천년전(6.1~9.5,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울시향 음악회(6.8~10), 발레-오페라 합동 공연을 비롯해 전시회, 음악회, 공연, 연극,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가 치러졌다.

〈표 II-3〉 2010년 한·러 문화축제 공식행사 주요 내용

시기	문화	포럼/컨벤션/교류
4월	-이상봉 패션쇼 -수교 20주년 축제 개막식	
5월	-한·러 국제미술교류전	-세계일류한국상품전 -수교 20주년 기념 부산-상트 교류행사
6월	-영상전시 Ideas In Motion -서울시향 음악회 -에르미타주 ‘한국 유물전시회’ -기념음악회: 오페라(Iolanta), 〈알레코〉 -코리안 난버벌 워크	-제11차 한·러포럼 -부산시 무역사절단 파견 -대구시 통상 교류단 파견 -한·러 청소년 교류

⁴¹ 문화축제의 기념행사 개막식은 4월 2일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폐막식은 11월 10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이뤄졌다.

I
II
III

시기	문화	포럼/컨벤션/교류
7월		-블라디보스톡 도시설립 150주년 기념행사 -부산-하사롭스크 간 청소년 문화교류
8월	-2010 전주 한집누하제(상트) -대구-상트 미술협회 간 미술교류전	-재러/CIS 고려인 동포 과학자 대회
9월	-PROTEATR 2010 페스티벌 -(Brother)공연 -툰드라 아리랑 연극 <미하일 김 이야기> -수교 20주년 친선 음악회 -전통무용공연단 파견	-수교기념 축하 리셉션 -제10차 한·러경제공동위 -부산KTF-연해주 스파르타 농구단 친선 경기 -한·러 단축마라톤 대회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10월	-한·러 공동제작 발레<로미오와 줄리엣> -한국영화제	-한국 식문화 홍보 행사(2차)
11월	-크로아체르 소나타 -수교 20주년 축제 폐막식	

출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0 러시아 리포트』 (서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0), p. 54.

이러하면 기념 전시회의 경우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6.1~9.5)은 “솔숲에 부는 바람, 한국 미술 5000년” 제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유물전이 개최되었다. 이밖에도 한·러대화 주최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전: 다시 만나는 이웃 러시아” 제하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전도 치러졌다. 이는 반민반관의 성격이 투영된 것이었다. 2010 축제의 일환으로 ‘러시아주간’ 행사(7.24~8.1)도 이뤄졌고, 연극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공연도 성사되었다. 한·러수교 20주년 맞아 한국과 러시아의 상호 문화교류는 크게 증진되었다. 문화외교 측면에서의 성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주년이라는 특정시점을 특화시켜 기념하는 행사 성격이 포함됨으로써 평상적인 시점에서 문화교류가 지속성을 띠도록 하는 과제 또한 남겨주었다.

비록 횡수와 규모가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한·러 수교 20주년 이후의 시기에도 문화행사, 예술프로젝트, 전시회, 공연 등이 이어졌다. 2011년

의 경우 한글날 기념 어학 경진대회, 러시아를 주제로 한 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교류 협력 증진이 이룩되었다. 특히, 한·러수교 21주년 및 한글날 기념으로 러시아 국립사회대가 독도를 주제로 한 한국어 말하기 경시대회를 개최한(10월, 모스크바) 점도 주목을 끌었다. 문화 공연도 지속되어, 2011년에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하였으며(11월), “러시아의 밤-백야,” “서혜경과 함께하는 ‘러시아センチ멘탈’” 등 러시아를 주제로 한 문화 예술 공연도 무대에 올랐다.

2012년의 경우 러시아에서 로스토프 나 도누 한국문화행사(5월)가 개최되었고, 7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여 이르쿠츠크와 바이칼호수에서 ‘바이칼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예술 프로젝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전시회로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색을 담다’ 제하 성지혜 미술전(6월), 국제교류작가협회의 ‘한국 도예의 어제와 오늘’전(10월)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동년 10월에는 류드밀라 울리츠키야 작가가 박경리 세계문학상을 수상(10월)하게 되어 한·러 간 문화증진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이밖에도 극단 ‘물결’과 ‘뚝’의 모스크바 공연이 이뤄졌으며, 제34회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에 한국 영화 세 편이 참가하기도 하였다.⁴² 문화 예술 공연으로는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초청 피아니트스 안미현 독주회(1월), 서울바로크합주단의 러시아 공연(2월)이 있었으며, 모스크바 방송교양악단(10월)과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와 김기민 발레리노가 활약하는 발레단(11월)이 내한 공연을 가졌다.

토지문화재단은 2012년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외국작가 중에서는 최초로 러시아 여류 작가 류드밀라 울리츠키야를 선정하여 수상하고, 이 작가의 작품집을 번역 출간하였다. 과거의 양국 간 문화교류가 상호 방문과 강연회 위주의 일방적 소통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달리, 문학상을 매개로

⁴² 『변신』 (윤기남 작), 『지옥화』 (이상우 작), 『달팽이의 별』 (이승준 작) 등이다.

러시아 작가와 한국 독자가 긴밀한 교류의 기회를 가진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민간 및 종교단체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모스크바의 원광 문화센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국문화센터’ 등 문화센터들도 한국어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문화외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러 문화외교는 전시회, 공연, 음악회, 연극, 영화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 기념해 치러진 문화축제가 양국 간 문화교류의 정점을 이루었으며, 이후 교류 규모와 횟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셋째, 러시아에 대한 문화외교는 내용측면에서 볼 때 통일공공외교의 측면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넷째, 주러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며, 통일공공외교의 측면에서 문화자산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다.

(3) 기업외교 추진 실태

(가) 정부 차원

기업외교는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현지 활동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마라톤 대회 개최, 기업 후원 장학금 지급, 인턴십 제도의 운영 등이 포함된다. 주로 러시아에 진출한 민간 기업이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민관협의 채널로 이뤄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외교는 정상외교 시 경제사절단을 함께 동행하는 것, 투자설명회의 개최 등이 있을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를테면 2011년 7월 부산시는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과 하바롭스크에 경제교류단을 파견해 실질적 교류 확대를 추진하였다. 8월에는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가 러시아 모스크바와 톰스크시를 방문해 국제과학기술센터(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Center : ISTC)와의 기술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경상남도가 연해주 경남농장의 영농 사업을 확대하였고, 울산상공회의소도 러시아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회(11월)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업외교라 보기 힘들며, 1.5트랙과 민간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나) 1.5트랙 차원

지식경제부, 무역협회, 러시아 연방상의, 산업기업가연맹이 공동 주관한 제3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2010.11.10, 서울)가 좋은 사례이다.⁴³ 이 자리에서 한·러 에너지, 자원개발, 지역협력, IT, 이노베이션, 운송 및 인프라 등 미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에너지효율센터 설립 협력 서명서, 전력망 현대화 협력 MOU, 스콜코보 프로젝트 협력 MOU 등 총 6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중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체화시켜 나간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러 비즈니스 포럼도 기업외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FEFU)이 공동 주최한 ‘한·러 극동 비즈니스 포럼’도 2010년 11월 개최된 바 있다. 이밖에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에너지관리공단, 기업관계자 및 러시아 에너지부, 에너

⁴³ 2008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양국 민간경제 협력을 위한 핵심적 창구로 부상하였으며, 기업들은 미래협력 사업 발굴하고 사업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 무역협회, 러시아 연방상의 등이 공동 주관한 제4차 한·러 비즈니스 대화(10.12, 모스크바)가 개최되었고, 2012년 9월 모스크바에서 제5차 한·러 비즈니스 대화가 개최되는 등 지속성을 띠며 진행되고 있다.

지절약기업(FESCO) 등이 참여한 ‘한·러 에너지 효율화 포럼, 기업상담회’ (12월, 모스크바)도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부산국제교류재단 한·러협력센터도 2012년 10월에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을 개최하였고, 11월에는 ‘부산-러시아-CIS 온라인 상품전시관’⁴⁴을 개관하는 등 기업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민간 차원

러시아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한 문화외교가 실현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3년 톨스토이 재단과 공동으로 ‘야스나야 폴라나 문학상’을 제정하여 매년 러시아 중진 및 신예 작가에게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볼쇼이 극장과 에르미타주 박물관 후원 등을 통해 위대한 러시아 문화와 함께하는 세계적 브랜드 삼성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산학협동재단은 이 지역 대학과의 협력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2년부터 극동연방대학, 사할린국립대학 등의 이공분야 전공자 20여명에게 장학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반관반민 형태의 틀로 한·러 기업과 정부가 교류 협력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우리의 경제 및 비즈니스 관련 자산이 공공외교 추진의 중요한 자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까지는 이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⁴⁴ <<http://burubiz.org/xe>> (검색일: 2013.10.12).

(4) 스포츠와 관광외교 추진 실태

스포츠외교는 한·러 양국의 운동선수가 주축을 이루며, 양국이 개최하는 각각의 국제경기에서의 참여와 활약이 포함된다. 리듬체조 부문에서 손연재 선수가 러시아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국제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축구선수로 러시아 프로리그에 진출한 사례, 러시아 출신 골키퍼 신의손의 한국 귀화,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의 러시아 귀화도 있다. 대한삼보연맹은 삼보와 관련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의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개최에의 상호 협력도 스포츠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한반도 통일과 연계된 스포츠외교는 특화된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외교는 아직까지 러시아에 보편화되지 않은 부문으로, 주로 러시아인들의 건강과 연계된 관광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오는 의료관광객의 숫자는 매년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어에 물린 사람이 부산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기사 등 러시아 언론에 게재된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 덕분이다. 반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DMZ 생태계에 대한 알림 등 남북한 분단 현실을 투영하는 관광외교는 현재로서는 아주 미흡한 상태로 평가된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문화예술자산을 1위로, 경제자산을 2위로, 인적자산 3위, 지식자산과 스포츠 자산을 각각 4, 5위로 파악하고 있다.⁴⁵ 반면 실제 전개된 부문별 교류의 협력 정도와 수준 측면에 있어 지식외교와 문화외교, 기업외교의 순으로 이뤄져 대상국인

⁴⁵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1,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261 참조.

러시아와의 정책적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후일 러시아에 대한 통일공공외교에 있어 예술문화자산과 경제자산을 보다 활용하는 정책과 전략 구사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통일공공외교는 목표와 전략, 체계적 추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미비점을 안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주로 지식외교, 문화외교, 기업외교에 치우쳐 있으며, 일반적 공공외교에 해당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일’과 직접 연관된 부문은 크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외교와 문화외교 부문에서도 ‘통일’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러시아에 대한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또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뿐만 아니라 통일관련 러시아에 대한 공공외교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러시아에 대한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러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전략, 체계, 목표 및 세부 프로그램의 발굴, 진행 등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북핵문제 협력 유도

(가) 정부 차원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대화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핵문제에의 협력을 유도하는 공공외교는 통일외교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볼 수

있다. 전략대화와 초빙외교, 포럼, 공동학술회의 개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무현 정부 시기에 동북아시아위원회와 러시아의 전략연구센터가 세 차례에 걸쳐 전략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정부가 바뀌면서 지속성을 띠지 못하고 중단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정부의 변화가 아닌 국익과 통일의 관점에서 지속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긴요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금년 10월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 주관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평화통일포럼’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러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통일문제를 직접 다루는 포럼으로 출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북, 한·러관계를 비롯해 남북한 통일문제와 연계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통일관련 공공외교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나) 1.5트랙 차원

러시아에 대한 1.5트랙 공공외교의 대표주자인 국제교류재단의 경우 한·러 양국 간 전문가와 여론주도층의 지식인들이 모여 한·러관계의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분야별 한·러 관계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핵문제’만을 특화된 논의 주제로 삼지 않고 있다.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측면에 국한시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국 전문가들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맥 구축과 교류 증진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책연구소로서 국립외교원의 경우 러시아의 IMEMO와 상호 학술교류를 하고 있으며, 한·중·러 3자 학술회의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성격

상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룸으로써 유관국 전문가들의 인식과 이해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도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러시아 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돕고 있다. 또한 러시아 유관연구소와의 학술 교류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초빙 연구원으로 초청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 민간 차원

민간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공공외교와 관련시켜 다루는 행위 주체는 역대 정부에 걸쳐 거의 변화가 없다. 즉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러대화(KRD)가 새로이 구성되어 활동 중인 것을 빼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어 거의 변함없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역대 정부별로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책적 의미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주요 주체는 한·러대화, 한국슬라브학회 등 러시아 관련 학회 및 주요 대학 러시아연구소, 한·러비즈니스협의회(www.krbcouncil.org), 한·러교류협회(www.koruss.org), 한·러협회(www.kraruss.com) 등 한·러 유관 사회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아직까지는 경험 증진, 한·러 교류 축제 등 경제와 문화 예술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통일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한·러 대화의 경우 ‘교육과 과학,’ ‘언론과 사회,’ ‘문화와 예술,’ ‘정치와 국제관계,’ ‘경제와 통상,’ ‘차세대’ 등 여러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북핵문제는 ‘정치와 국제관계’ 분과에서 다뤄질 수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열린 회의에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글로벌 문제 해결,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 동북아 다자안보, 한·러 정치외교 분야 인적 교류 증진, 한·러 에너지 협력, 러시아 극동개발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중점을 두고 한·러 대화를 특화시켜 논의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낸 것이며, 통일관련 공공외교와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내 슬라브학계에서는 비교적 ‘북핵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6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 등 세분화된 주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국슬라브학회의 경우, 학술회의를 통해 ‘대북, 통일정책 협력 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협력 도출 방안,’ ‘통일외교를 위한 러시아 설득 방안’ 등의 연구 주제도 다루었다. 또한 인문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러 공공외교와 연계된 학술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⁴⁶ 다만, 국내에서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러시아 학계에 어떻게 전달시키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양대, 한국외국어대학 등은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한·러 국제학술회의를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다.⁴⁷ 학교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러 간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북핵문제’ 자체만을 전체 주제로 다루지 못하고, 회의 의제 중 일부에 한정되어 다루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앞에서 제시한 목표들에 크게 근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각 정부별로 ‘북핵문제’와 연계된 통일관련 공공정책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문제’ 관련 통일공공외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민간 차원에서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는 체계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깊이와 논의 수준도 일천하다. 중구난방의 성격이 강하며, 종합적인 접근 틀을 지니고 있지 않다. 둘째, 공공외교 추진의 목적을 잘 인식하

⁴⁶ 엄구호, “서로에게 매력적인 국가를 만드는 공공외교: 러시아의 한국 이미지와 대러 공공외교 방향” 참조.

⁴⁷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는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와 상호 방문 형식으로 25차례에 걸쳐 한·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동서사회연구소와 상호 학술 교류를 해 오고 있다.

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으며, 시민단체, 학계, 민관단체 등 행위 주체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역대 정부별 통일관련 공공외교 정책 추진의 차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행위 주체들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북핵문제를 별도의 공공외교 의제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점이자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이 독자적인 외교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대북정책, 대러 정책의 연장선에서 부차적인 시안으로 특별한 전략적 인식 없이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러시아에 대한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과 정책적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도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도 “매우 낮다(2.7%)”와 “낮다(59.5%)”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⁴⁸ 또한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러시아 국민의 무관심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러시아 국민들에게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공공외교의 효과 증진을 위한 노력이 긴요해 보인다. 또한 각 연구소별 국제학술회의, 콜로키움, 연구자료 발간사업, 초빙 강연, 교육 및 학술교류 등은 향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산이자 수단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는 기존의 공공외교 수단을 통일관련 공공외교와 접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러시아의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⁴⁸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pp. 275~276 참조.

3. 전문가 인식조사

가. 전문가 인식조사 특징

설문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러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주요 핵심 지역 및 인구의 대부분이 유럽 러시아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한반도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설문의 구성에 있어서 이 같은 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설문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2부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했다. 3부의 경우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련된 것이며, 특히 러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관심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 핵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국내와 러시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총 38인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국내 지역 16인 그리고 러시아 지역 22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 학계의 해당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했다. 러시아 지역의 경우 학계, 언론사,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인사들을 설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러시아 지역 설문의 경우 현지에서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인사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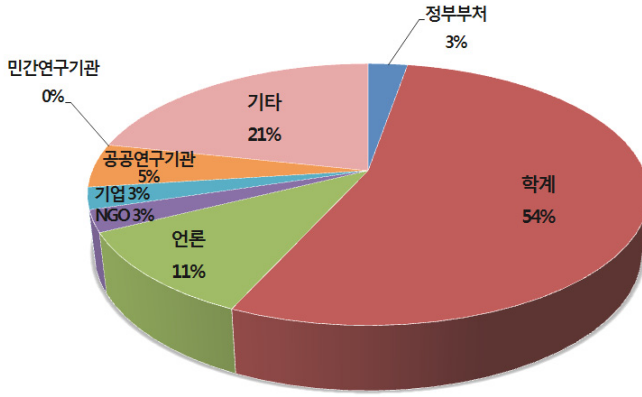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계 종사자이며,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특성은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과, 러시아 내 한국 관련 공공외교 전문가 숫자에 제한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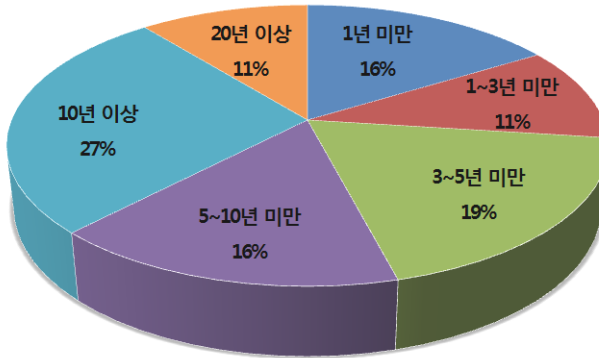
III

〈그림 II-1〉 소속 기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가 54%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1%로 그 뒤를 이었다. ‘언론’은 11%의 응답률을 보였고, ‘공공연구기관’이 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정부부처’와 ‘기업,’ ‘NGO’가 각각 3%를 차지했다.

〈그림 II-2〉 업무 경력



한반도 통일관련 업무(연구) 경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5년 미만’이 19%로 두 번째로 많았다. ‘5~10년 미만’과 ‘1년 미만’이 그 뒤를 이어 각각 16%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 나머지로 ‘20년 이상’과 ‘1~3년 미만’이 11%씩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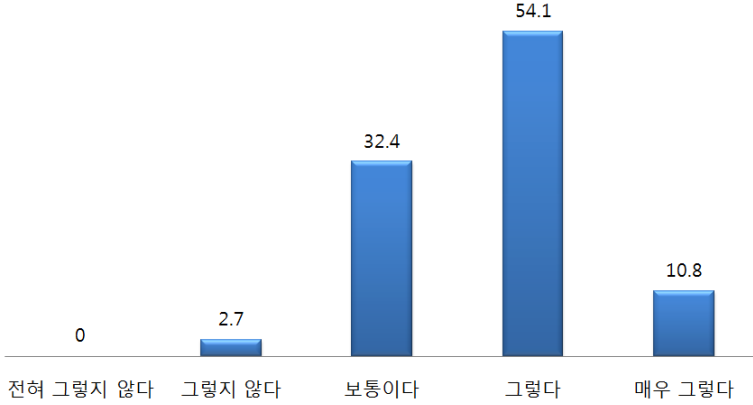
나.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 주요 목표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경우 정부주도형과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주요 행위자로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라는 응답이 많아 민간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는 주로 경제 분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동북아 및 북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러시아라는 응답은 극히 저조하여 취약한 한국의 對러시아 공공외교의 현실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 자산으로는 문화예술 분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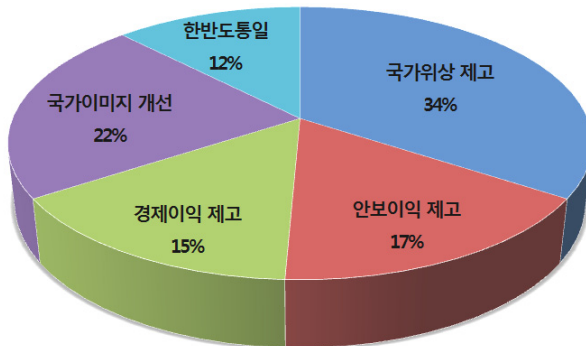
〈그림 II-3〉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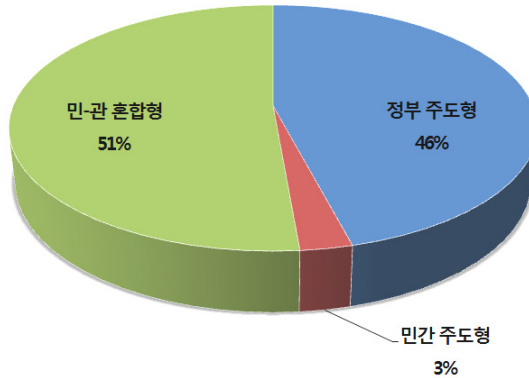
본 연구팀이 정의하는 공공외교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32.4%로 그 뒤를 이었다. ‘매우 그렇다’는 10.8%를, ‘그렇지 않다’는 2.7%의 응답률을 각각 기록하였다.

〈그림 II-4〉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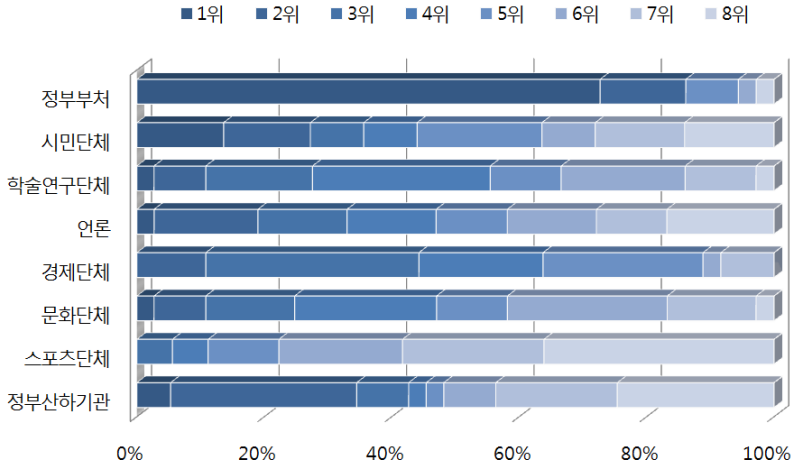
‘국가 위상 제고,’ ‘안보 이익 제고,’ ‘경제 이익 제고,’ ‘국가 이미지 개선,’ ‘한반도 통일’이라는 다섯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 중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국가 위상 제고’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응답이 22%로 그 뒤를 이었고, ‘안보 이익 제고’가 17%, ‘경제 이익 제고’가 15%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은 12%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5〉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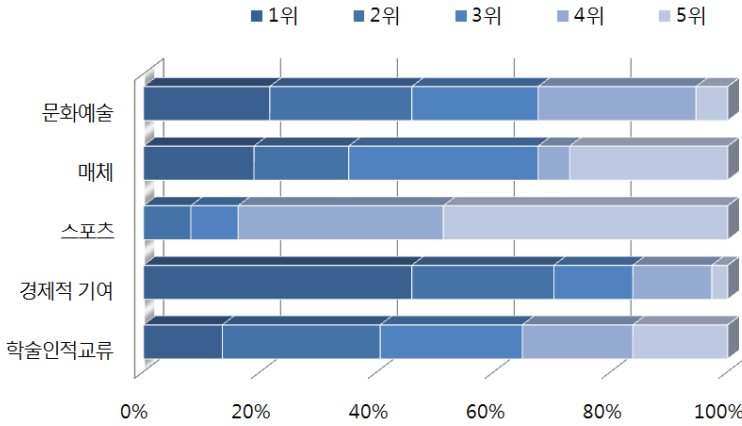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추진체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부 주도형’이 46%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은 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6〉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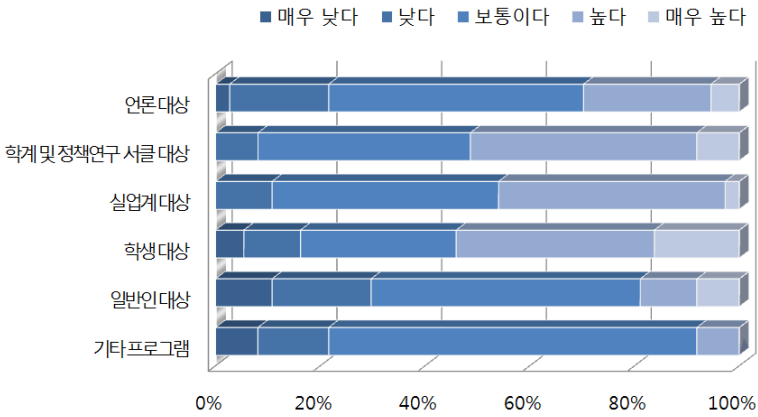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여덟 개의 선택지를 제시한 후, 이 중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부터 8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를 차지했다. ‘정부산하기관’은 2위, ‘학술연구단체’는 3위, ‘경제단체’는 4위로 나타났다. 5위는 ‘언론,’ 6위는 ‘문화단체,’ 7위는 ‘시민단체,’ 8위는 ‘스포츠단체’로 나타났다.

〈그림 II-7〉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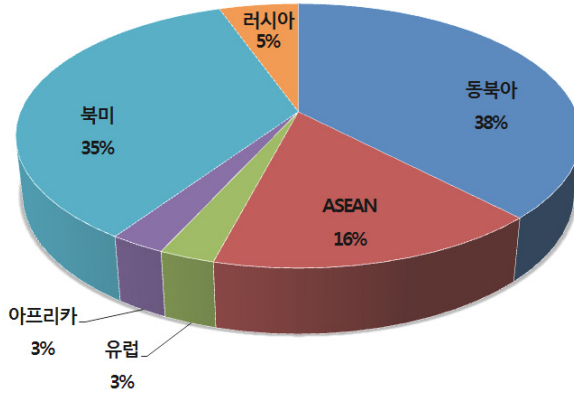
문화·예술, 매체, 스포츠, 경제적 기여(ODA), 학술·인적교류의 다섯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 중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부터 5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1위는 ‘경제적 기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은 2위, ‘학술·인적교류’는 3위, ‘매체’는 4위를 차지했다. ‘스포츠’가 가장 낮은 5위를 기록했다.

〈그림 II-8〉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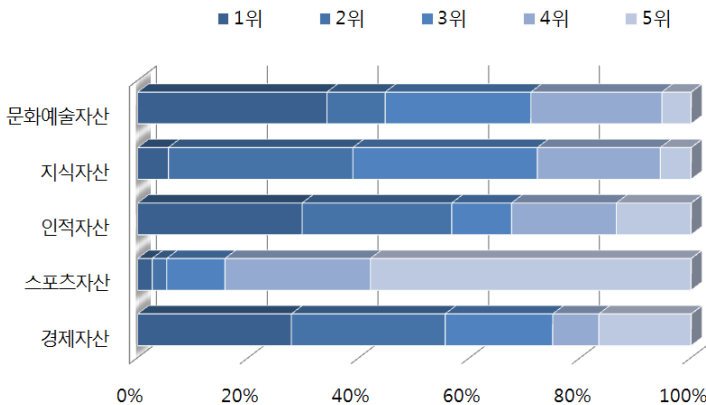
언론 대상 프로그램,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대상 프로그램, 실업계 대상 프로그램, 학생 대상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 선택지를 제시 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비중(중요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1에서 5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가장 비중이 크다고 평가되는 것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대상 프로그램’이 이었다. 3위는 ‘언론 대상 프로그램,’ 4위는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5위는 ‘실업계 대상 프로그램’이었으며, ‘실업계 대상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한국이 추진 중인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북미’라는 응답이 35%로 그 뒤를 이었다. ‘ASEAN’이라는 응답은 16%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가 5%의 응답률을 보였다. ‘아프리카’와 ‘유럽’이 각각 3%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림 II-10〉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I
II
III

문화·예술자산, 지식자산, 인적자산, 스포츠자산, 경제자산의 5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후, 이 중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부터 5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문화·예술자산’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제자산’, 3위는 ‘인적자산’, 4위는 ‘지식자산’이 각각 기록했으며, ‘스포츠자산’은 가장 낮은 5위의 중요도를 보였다.

(2)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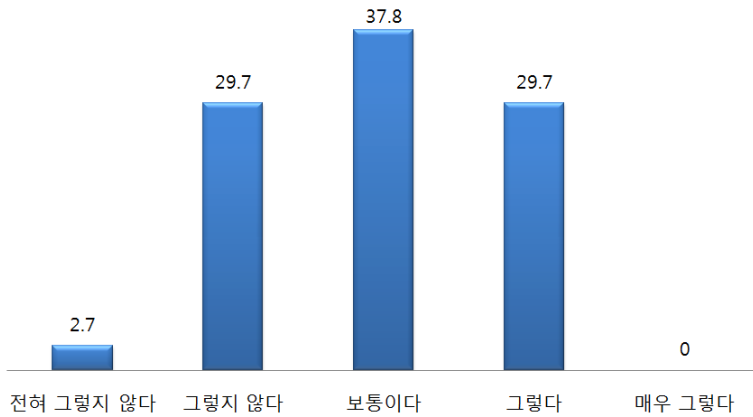
한국의 대러 통일공공외교 평가의 경우 공공외교 전반에 비해 긍정적 평가가 낮아 취약한 대러 통일공공외교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매체는 언론과 인터넷이 80%를 상회함으로써 러시아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일공공외교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했다.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5% 수준이었으며, 주로 북핵문제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북핵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내 통일공공외교 대상으로는 언론, 학자, 정치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하는 통일은 대부분 점진적 통일로 이해했으며, 그 중 남한 주도가 다수였다.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으로는 북핵문제와 남북한 상호불신이라는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러시아내 통일공공외교는 주로 외교안보적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북한변화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이어 북한 비핵화를 들었다.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는 정부 주도형과 민·관 혼합형이 각각 48%이며, 추진주체도 정부라는 응답이 다수라는 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통일공

공외교에 긍정적인 국가가 러시아라고 응답해 미국이라는 응답을 추월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 확대 및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현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공공외교 성과가 높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II-11〉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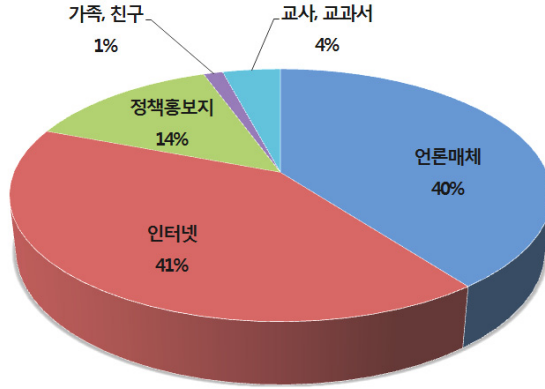
본 연구팀이 정의하는 통일공공외교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9.7%로 그 뒤를 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2.7%를 기록하였다.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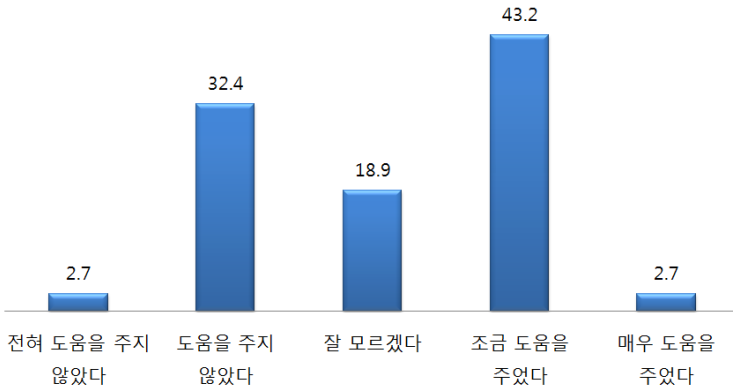
〈그림 II-12〉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



언론매체, 인터넷, 정책홍보지, 가족/친구, 교사/교과서라는 다섯 가지 선택지를 제시 후, 어떤 통로를 통하여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관하여 접하게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토록 한 결과,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언론매체’가 4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책홍보지’는 14%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교사/교과서’는 4%의 비율을, ‘가족/친구’는 1%의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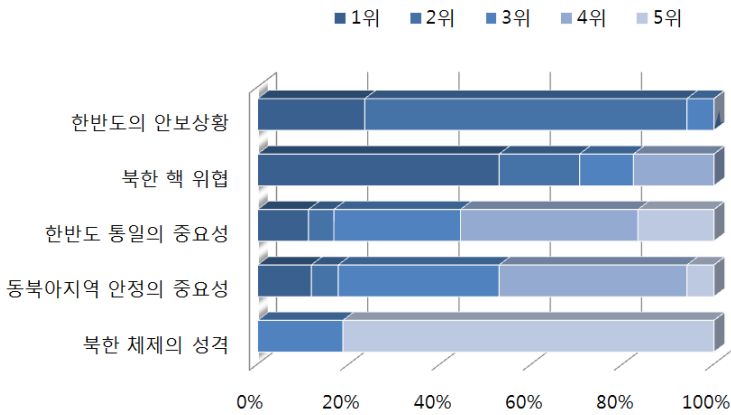
〈그림 II-13〉 러시아 국민들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도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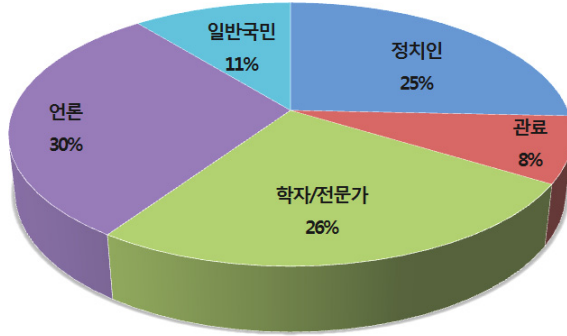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이 한반도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조금 도움을 주었다’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32.4%로 그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8.9%로 나타났다으며, ‘매우 도움을 주었다’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각각 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1-14〉 러시아 국민의 한반도 인식에 도움을 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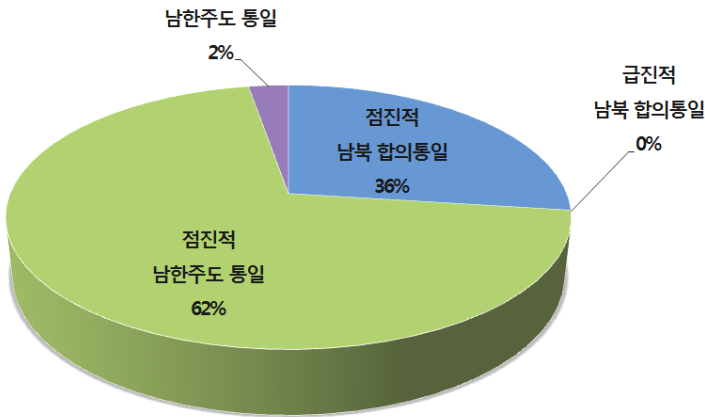
‘한반도의 안보 상황,’ ‘북한 핵 위협,’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북한 체제의 성격’이라는 다섯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움을 주었다’고 반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위 다섯 가지 선택지 중 무엇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북한 핵 위협’이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 3위는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성,’ 4위는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이었으며, ‘북한 체제의 성격’이 가장 낮은 5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II-15〉 러시아 국민 내 한국 통일공공외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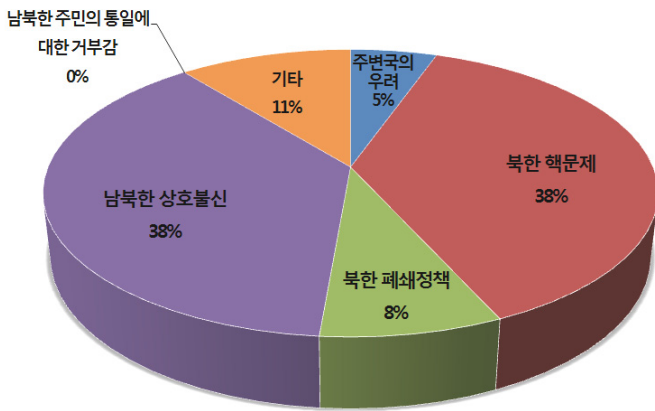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일반국민이라는 5가지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주된 대상은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언론’이 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자/전문가’라는 응답은 26%였고, ‘정치인’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 국민’은 11%, ‘관료’는 8%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II-16〉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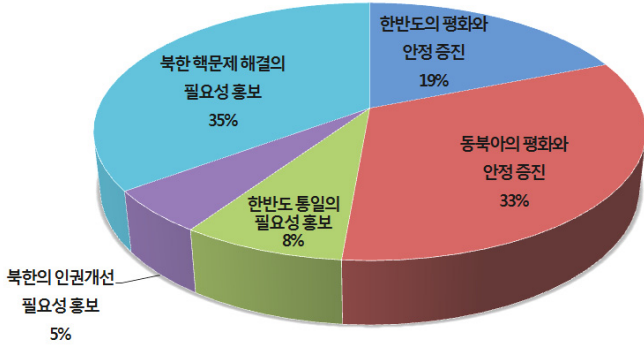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가 어떠한 형태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점진적 남한 주도 통일’이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점진적 남북 합의 통일’이라는 응답이 36%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급진적 남한 주도 통일’이 가장 낮은 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림 II-17〉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한국이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상호불신’과 ‘북한 핵 문제’가 각각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가 11%를 기록했다. ‘북한 폐쇄정책’은 8%, ‘주변국의 우려’는 5%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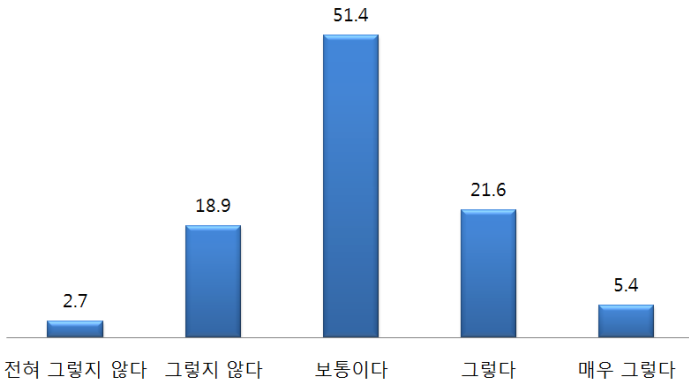
〈그림 II-18〉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분야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추진 중인 통일공공외교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는 응답이 33%로 그 뒤를 이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는 응답은 19%를 기록하였으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홍보’는 8%,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 홍보’는 5%를 각각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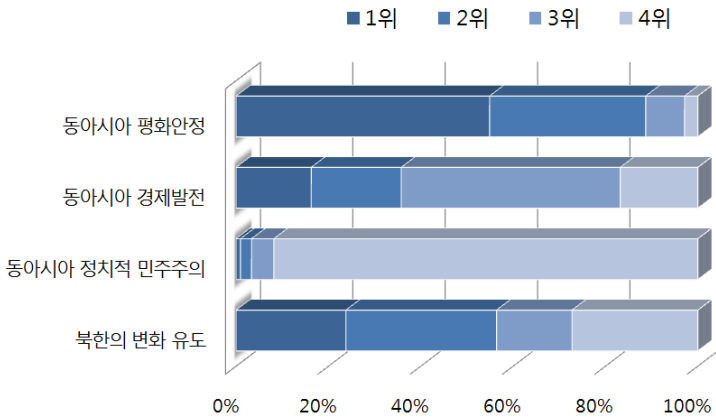
〈그림 II-19〉 한국 통일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 국민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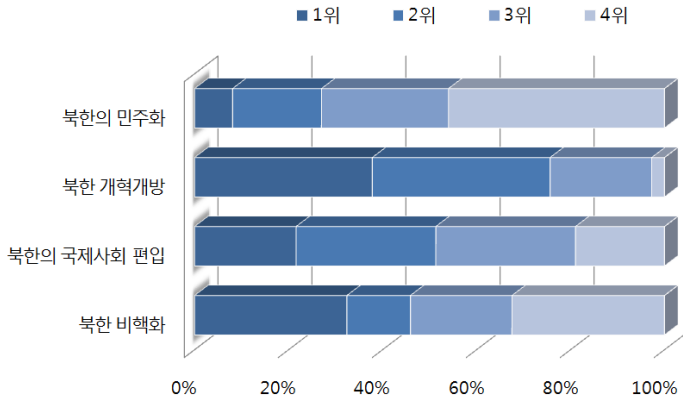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라는 응답이 21.6%를 기록하였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8.9%로, ‘매우 그렇다’는 5.4%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2.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II-20〉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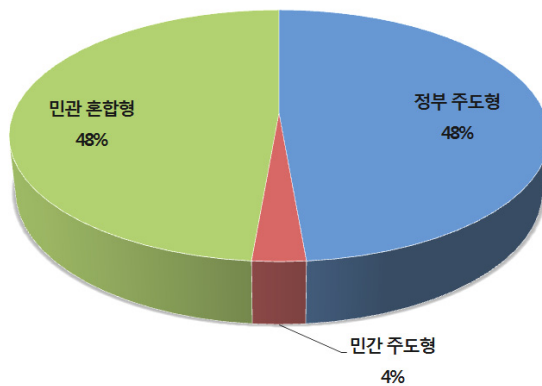
‘동아시아 평화·안정,’ ‘동아시아 경제 발전,’ ‘동아시아의 정치적 민주주의,’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4가지 선택지를 제시 후,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부터 4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동아시아 평화·안정’이 1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2위는 ‘북한의 변화 유도,’ 3위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이었으며, ‘동아시아 정치적 민주주의’가 가장 낮은 4위로 나타났다.

〈그림 II-21〉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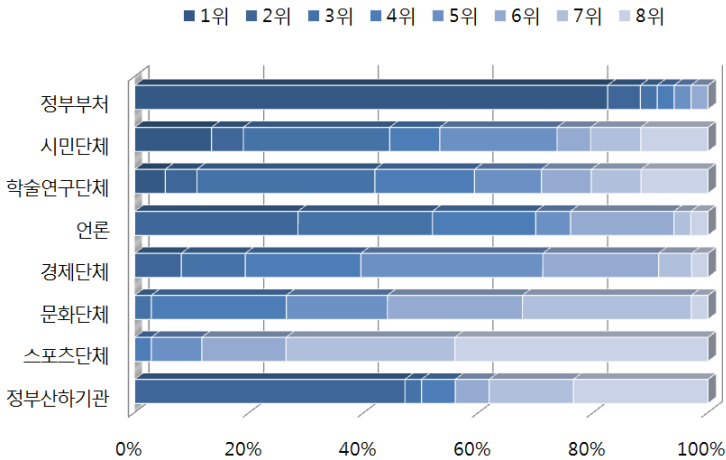
‘북한의 민주화,’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편입,’ ‘북한의 비핵화’라는 4가지 선택지를 제시 후,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북한 비핵화,’ 3위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4위는 ‘북한의 민주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2〉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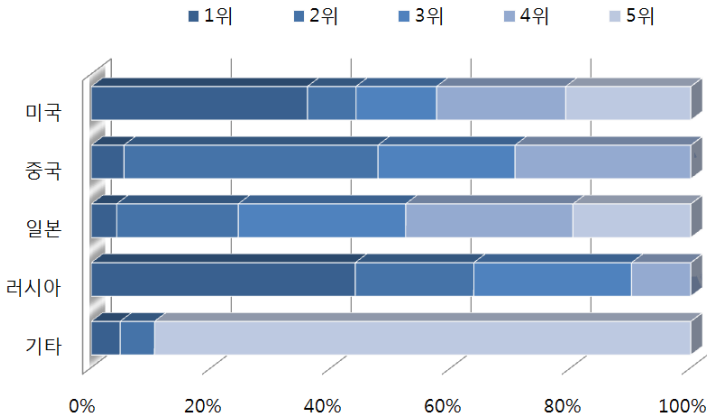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부 주도형’과 ‘민·관 혼합형’이 각각 48%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민간 주도형’은 4%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23〉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 주제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이라는 8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담당기관 및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를 기록했고, ‘정부산하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 ‘스포츠단체’는 가장 낮은 8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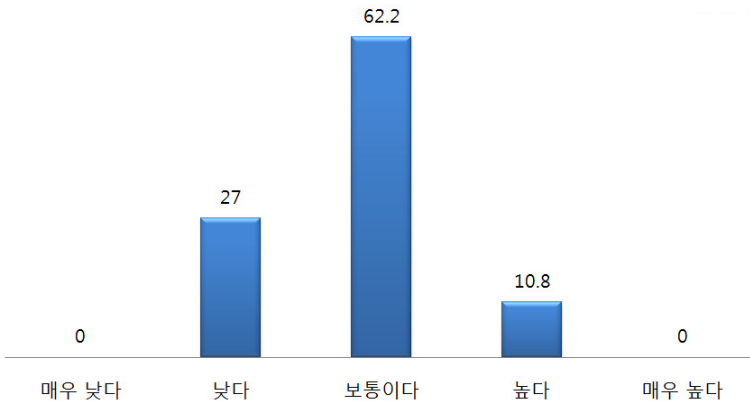
〈그림 II-24〉 한국 통일공공외교에 긍정적인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의 5개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긍정적 태도의 강도에 기초하여 순위를 기입한 결과, ‘러시아’가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는 ‘일본’이었으며, ‘기타’는 5위를 기록했다.

〈그림 II-25〉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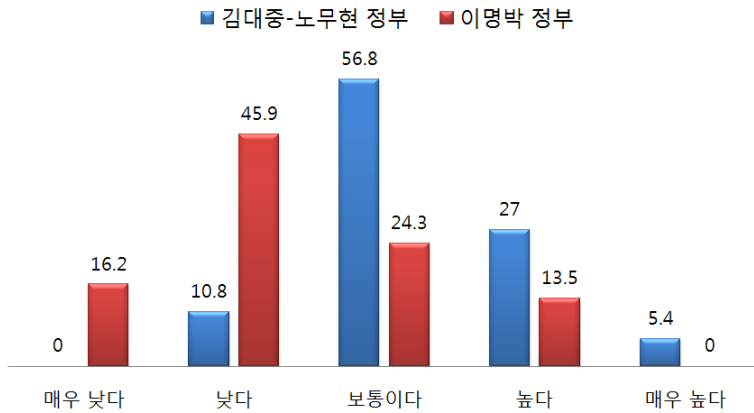
(단위: %)



한국이 15년간 추진해 온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하였다. ‘매우 낮다(1)’에서 ‘매우 높다(5)’까지 다섯 가지의 척도 점수를 제시하고, 해당 점수에 표시토록 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낮다’가 27%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높다’는 10.8%의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II-26〉 정부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단위: %)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제시한 후, 두 정부가 실시한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높다’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낮다’는 10.8%를 기록했으며, ‘매우 높다’가 가장 낮은 5.4%를 기록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낮다’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24.3%로 그 뒤를 이었다. ‘매우 낮다’라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으며, ‘높다’라는 응답은 13.5%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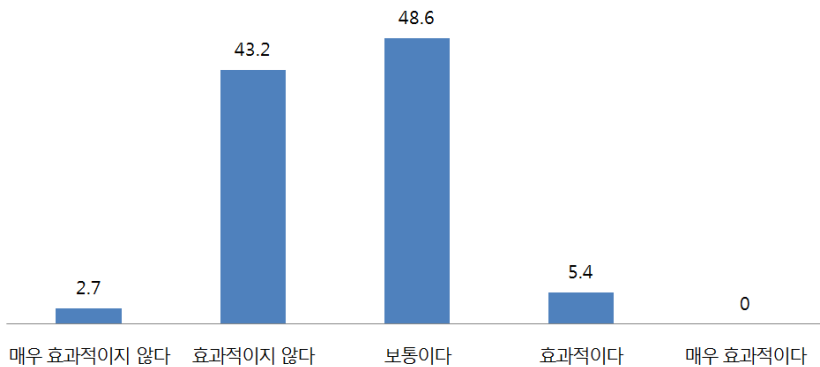
(3) 한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는 한반도 비핵화에 이어 북한의 핵공격 저지라고 응답하여 한반도 통일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2.7%에 불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러시아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응답,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한반도와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지정학적 특성상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는 정부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며, 추진 형태도 대부분 정부주도와 민·관 혼합형이라고 응답하여 한국정부의 영향력 아래 공공외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II-27〉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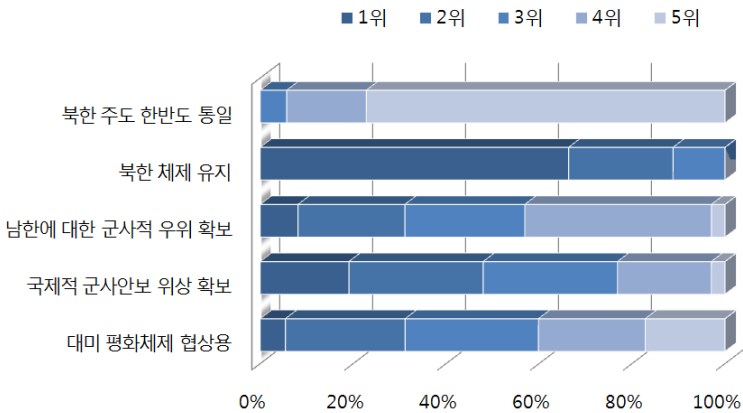
(단위: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하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가 48.6%로 가장 높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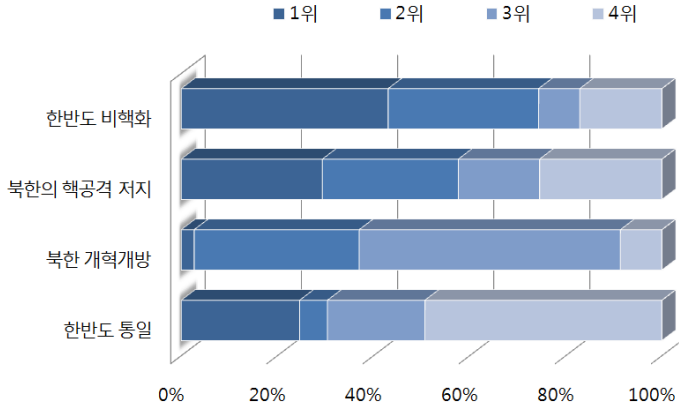
을 차지했고, ‘효과적이지 않다’가 43.2%로 그 뒤를 이었다. ‘효과적이다’는 5.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는 가장 낮은 2.7%를 기록했다.

〈그림 II-28〉 북한의 핵개발 의도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북한 체제 유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 ‘국제적 군사안보 위상 확보,’ ‘대미 평화체제 협상용’이라는 5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북한 체제 유지’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국제적 군사안보 위상 확보,’ 3위는 ‘대미 평화체제 협상용,’ 4위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은 가장 낮은 5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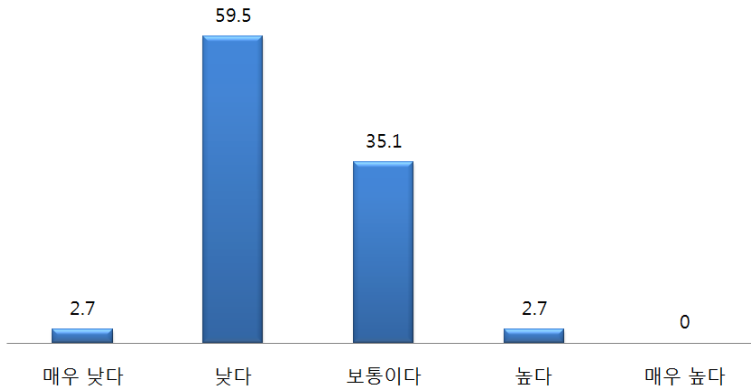
〈그림 II-29〉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 공격 저지,’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이라는 4개의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한국이 추진 중인 북한 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북한의 핵 공격 저지,’ 3위는 ‘한반도 통일’이었으며, ‘북한 개혁·개방’은 가장 낮은 4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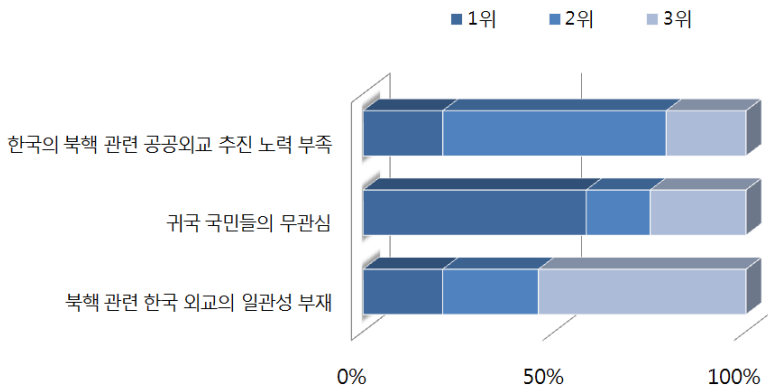
〈그림 II-30〉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북한 핵 관련 한국의 공공외교가 러시아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의 척도점수를 제시한 후, 해당 점수에 표시토록 하였다. 그 결과, ‘낮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35.1%로 그 뒤를 이었다. ‘높다’와 ‘매우 낮다’는 각각 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31〉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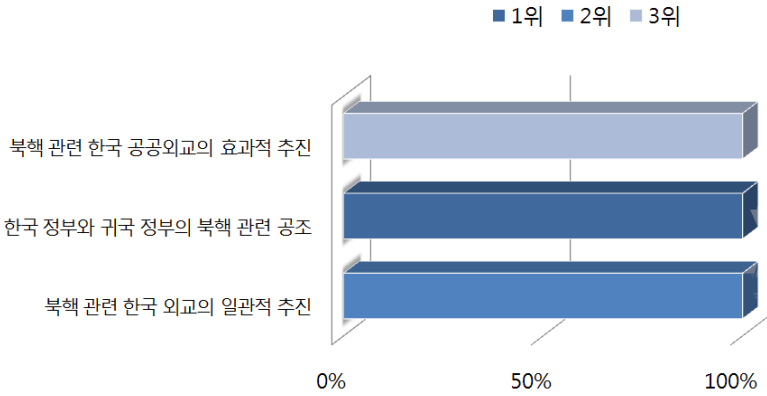
북한 핵 관련 한국의 공공외교가 러시아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반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노력 부족, 러시아 국민들의 무관심, 북한 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성 부재 라는 3개의 선택지를 제시한 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 국민들의 무관심’이 1위를 차지했고,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 노력 부족’이 2위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성 부재’가 가장 낮은 3위로 나타났다.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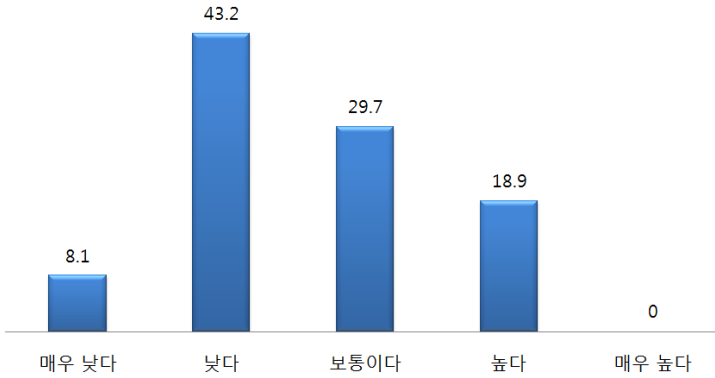
〈그림 II-32〉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이유



북한 핵관련 한국의 공공외교가 러시아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반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북한 핵 관련 공조의 영향, 북한 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적 추진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북핵 관련 공조’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적 추진’이었으며, 3위는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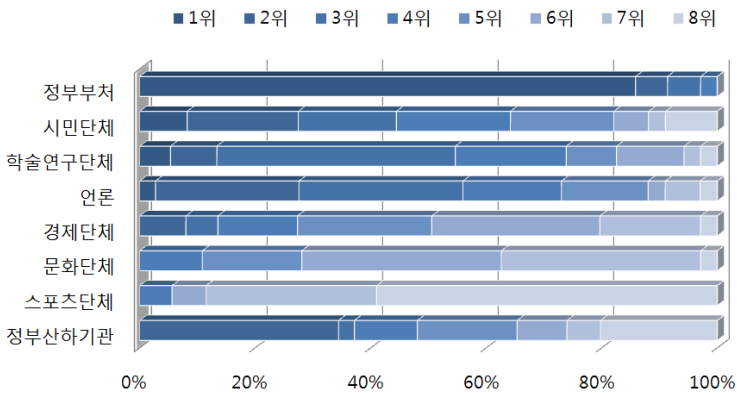
〈그림 II-33〉 북핵 정책 수행 시, 러시아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도

(단위: %)



러시아 정부는 북핵 정책 추진에 있어서 러시아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의 척도점수를 제시 후, 해당 점수에 표시토록 하였다. 그 결과, ‘낮다’라는 의견이 43.2%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다’가 29.7%로 그 뒤를 이었다. ‘높다’라는 응답은 18.9%로 나타났으며, ‘매우 낮다’가 가장 낮은 8.1%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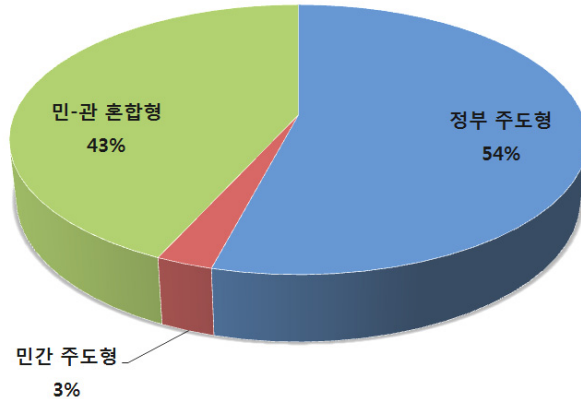
〈그림 II-34〉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



I
II
III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학술연구단체, 정부산하기관,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의 8개 선택지를 제시 후, 이 중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의 핵심적 담당기관 및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시민단체,’ 3위는 ‘언론,’ 4위는 ‘학술연구단체’였고, ‘정부산하기관’이 5위, ‘경제단체’가 6위, ‘문화단체’가 7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스포츠단체’는 가장 낮은 순위인 8위로 나타났다.

〈그림 11-35〉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핵문제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부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민·관 혼합형’이 43%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3%의 비율로 나타났다.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 시사점

1.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가. 對러시아 통일외교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대국 중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과 전략적 수단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외교 역량 및 자산의 투입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러 한반도 통일외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6자회담을 포함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노력했다. 둘째, 한·러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유도하려 노력했다. 셋째,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주요 관심사를 고려한 대러 외교를 추진했다. 넷째, TSR과 TKR 연결 및 가스관 연결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을 중요시했다. 다섯째, 러시아가 중시하는 대외정책 기조인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 규범 준수를 고려했다. 여섯째, 역대 정부별로 對러시아 통일외교 콘텐츠 부문에서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한국 정부의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를 견지했다고 할 수 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대북 온건정책에 보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보수정권에 비해 남북교류를 우선시 했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러시아의 관심사인 철도와 에너지 분야의 남·북·러 협력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성향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한·러 관계 증진, 그리고 남·북·러 경협사업 추진

등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입장 역시 지속 견지되고 있다.

최근 루스키 미르 재단 출범이 상징하듯이 러시아는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도 양과 질에 있어서 발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외교 역량 및 자원의 투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실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과 에너지·철도·해운, 그리고 극동 개발에 있어서 풍부한 남·북·러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한반도 통일 및 통일관련 對러시아 공공외교의 목표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제고와 협력의 유도,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함은 물론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극동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러시아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셋째, 탈북자 및 인권침해 등 북한 내 문제의 심각성과 이산가족 등 분단의 피해를 러시아인들에게 알리고 인류애 차원의 협력을 유도하는 일이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양국 간 정책 공조 강화와 아울러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한 러시아 내의 환경조성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및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위에

서 지적인 목표의 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공공외교가 독자적 외교 영역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북정책과 對러시아 외교정책의 연장선에서 부차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는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가 전략적 판단과 추진체계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공공외교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의 역대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의 도출을 비롯하여 6자회담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화를 지속해 왔다. 반면에 민간과 1.5트랙 부문의 경우 북핵이슈 및 통일공공외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민간 차원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는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민간 추진주체들의 공공외교 목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아울러 각 주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노력을 경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부유관 단체들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경우 효율적인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한국의 역대 정부의 통일관련 공공외교 정책도 차별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외교의 주체들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북핵문제를 의제로 하는 민간 차원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적은 외교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러시아 응답자의 64.9%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변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의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I

II

III

다. 전문가 인식조사 특징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분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 주요목표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경우 정부주도형과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주요 행위자로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는 주로 경제 분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동북아 및 북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러시아라는 응답은 극히 저조하여 취약한 한국의 對러시아 공공외교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주요 공공외교 자산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경제가 나타났다.

한국의 대러 통일공공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지 않았다. 지난 15년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매체는 대부분 언론과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이 주도하는 점진적 통일로 이해했으며,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으로는 북핵문제와 남북한 상호불신을 들었다. 러시아 내 통일공공외교는 주로 외교안보적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응답이 많았다.

북한 변화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들었다.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 및 주체에 있어서 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긍정적인 국가가 러시아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 확대 및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의 정권별 통일공공외교 성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은 대부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對러시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시사점과 과제

가. 對러시아 통일외교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발전적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러시아의 잠재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다. 푸틴체제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한·러 간의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삼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은 러시아와 한반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푸틴 정부의 신동방 정책은 상당한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통일외교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현에 있어서 러시아는 실질적인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평화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중·일간 협력과 같등이라는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로 이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I

II

III

국력이 약한 한국이 이를 주도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상호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러 간 협력의 구체화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실현하는 선도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와 에너지 분야의 한·러 간 협력의 확대는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수혜자로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의 확대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실용주의적 對한반도 정책을 활용하여 협력과 실질적 관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對러시아 통일외교의 새로운 계기로 신동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푸틴체제의 등장을 활용하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남·북·러 삼각 경협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기부터 북한의 참여를 포함하는 추진방안보다는 한·러 간의 협력관계의 심화 및 경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러 간의 협력확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외자의 도입 및 국제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러 삼각경협의 전제 조건은 안보문제의 불식이다. 남·북·러 삼각경협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위협요인의 제거 및 영향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와 가스관 연결사업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러 삼각경협사업의 추진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對러시아 외교협력관계의 확대 및 이를 위한 외교적 역량의 강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러 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러 협력 관계의 확대는 미국에 대응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러 관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콘텐츠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통일이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에게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관계 개선 및 발전은 러시아와 한·중·일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한·러 간의 협력관계의 확대는 러시아 지하자원의 개발과 소비, 극동지역 개발에 중국과 일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러시아의 對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적, 외교안보적 차원 모두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러시아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시스템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잠재력과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를 독자적인 외교 영역으로 인식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교 당국이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외교역량과 자원의 투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한다.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총체적인 추진체계의 확립과 컨트롤타워의 형성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효과적인 추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의 경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권위 있는 협의체 마련도 필요하다. 민간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문제, 추진 주체 간 중복사업 및 사업의 비계획적 추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주체의 노하우 및 경험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민간 차원의 지속가능한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중요 자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문화예술 자산과 경제자산을 들고 있으나 실제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는 지식외교와 문화외교, 기업외교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에 있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문화예술자산과 경제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정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의 對러시아 공공외교 전반의 프로그램과 통일 이슈 및 북핵 문제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인들이 북핵문제에 대해 다른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러시아인들에게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공공외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계 및 연구소 등 민간 및 1.5트랙 차원의 한·러 학술회의, 콜로키움, 그리고 학술교류 등은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 박영호·여인곤·조민·이기현·김성철.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알렉산드르 단킨. 김현택·이상준 역.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서울: 한국외대 출판부, 2012
- 제프리 코윈. 니콜라스 켈 편. 『새 시대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서울: 인간사랑, 2013.
- 조순. 허승철 역. 『한국경제개발의 역학』. Kyiv city: Dmytro Burago Publishing House, 2012.
-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서울: 청와대, 2009.
-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
- Liudmila, Popova. 『한국 개발과정에서 대외 경제적요인의 역할(1950~2011)』. St. Petersburg: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Press, 2012.

2. 논문

-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와 ‘통일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서동주. “푸틴정부하 북러관계와 對韓 파급영향.” 『국제문제연구』. 제3권 3호. 가을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 엄구호. “서로에게 매력적인 국가를 만드는 공공외교: 러시아의 한국 이미지와 대러 공공외교 방향.” 『인문외교가 중요하다』. 한국슬라브학회 기획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13.10.1.

한국외국어대 연구산학협력단. 『러시아 문화교류 기초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수탁과제. 2009. 11. 24,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71000-200900060>.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рия Левады. “Отчет 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Образ Коре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россиян”. Moskva, 2013.

Nokonov, V., Toloraia, G. and Vorontsov, A. eds. *Koreiskii Poluostrov: Vyzovy i Vozmozhnosti dlia Rossii : Kollektivnyi Doklad Ekspertov dlia Rossiiskogo Natsional'nogo Komiteta Aziatsko-Tikhookeanskogo Soveta Sotrudnichestva po Bezopasnosti (ATSSB)*. Collective expert report for the Russian National Committee of the Asia-Pacific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CSCAP) on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Moscow; MGU, 2011.

3. 기타자료

『조선일보』.

『중앙일보』.

고려대학교. <www.korea.ac.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부산-러시아-CIS온라인 상품전시관. <<http://burubiz.org>>.

외교부. <www.mofat.go.kr>.

주러 한국대사관. <<http://rus-moscow.mofa.go.kr>>.

주러 한국문화원. <<http://russia.korean-culture.org>>.

주한 러시아대사관. <www.russian-embassy.org>.

청와대. <www.president.go.kr>.

코트라. <www.kotra.or.kr>.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www.rus.or.kr>.

한러교류협회. <<http://koruss.org>>.

한러대화. <www.e-krd.com>.

<www.cikrf.ru>.

<www.kremlin.ru>.

<www.mid.ru>.

<www.scrf.gov.ru>.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 (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 (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 (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C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소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02)	조한범 외	17,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장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